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서 현 진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사회교과서에 나타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원리 내용분석

- 10학년 사회 ‘VIII. 정치 과정과
참여 민주주의’ 단원을 중심으로 -

2014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사회교육전공
박영화

사회교과서에 나타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원리 내용분석

- 10학년 사회 ‘VIII. 정치 과정과
참여 민주주의’ 단원을 중심으로 -

서 현 진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사회교육전공

박영화

인 준 서

박영화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고등학교 사회교과서의 “Ⅷ. 정치과정과 참여민주주의” 단원에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원리가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우리나라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정치체제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이념이 결합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폭넓게 인식되고 공유된 반면, 정치체제의 나머지 한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공화주의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갖는 내용적 풍부성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해 온 것이 사실이다. 더불어 법치주의, 권력분립 등 공화주의의 핵심원리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도 민주주의의 원리에 포섭되어 취급되었다.

최근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았다고 진단되면서, 이에 대한 처방 역시 공화주의에서 찾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본 연구는 그 동안 우리 사회과 교육, 특히 정치교육도 민주주의에 관한 내용은 상당히 강조되고 있는 반면 공화주의 관련 내용은 상당히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사회과 교육이 바람직한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치·태도를 함양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민주주의 원리와 더불어 공화주의 원리 역시 함께 교육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의 심화와 발전은 민주주의 내용과 더불어 공화주의 원리의 교육에 의해 보완·강화될 수 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에 현행 2009년 개정 교육과정 사회교과서 정치단원에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관련 내용이 어떤 비중으로 제시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집필되었는지 각 교과서를 바탕으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두 원리가 교과서에서 충실하게 구현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민주주의 관련 주제의 비중이 공화주의를 주제로 한 내용보다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교과서 본문에서 전반적인 민주주의 원리는 나름 충실히 설명된 반면 공화주의 자체에 대한 소개나 이해는 전혀 찾아 볼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탐구활동의 경우도 민주주의와 관련된 탐구활동 수가 공화주의 관련 탐구활동 수보다 많았다. 특이점은 민주주의에 대한 내용 중에서도 ‘참여’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공화주의 관련 주제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제외하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교육에 대한 편향성이 드러난 것에 더하여 민주주의 교육에 있어서도 참여에 지나친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현재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사상으로 ‘공화주의’가 주목받는 상황에서 고등학교 사회교과서 정치단원의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교육 내용은 그러한 조류를 잘 담아내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에 대한 조화로운 교육 내용으로 교과서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해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공화주의 원리 자체에 대한 복원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민주주의 원리로 다루어지고 있는 법치주의, 권력분립의 원리 등은 공화주의의 핵심원리에 더 가깝다. 공화주의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이들 원리가 공화주의 원리로 복원되어 교육될 필요가 있다.

둘째, 민주주의에 편중된 내용에서 벗어나 공화주의에서 강조하는 법치, 시민덕성, 심의기제, 공공선의 실현 등에 대한 내용도 비중 있게 교

육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원리들에 대한 조화로운 교육이 민주시민 육성의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셋째, 민주주의 교육에 있어서도 다양한 내용과 학습활동이 제시되어야 한다. 현재 민주주의 교육에 있어서도 지나친 참여의 강조에서 벗어나 국민주권의 원리, 다수결의 원리, 참여에 있어서 정치적 평등 등 기타 민주주의 운영에 중요한 원리들에 대해서도 풍부한 기술이 이루어지고 이를 심화시킬 수 있는 탐구활동들이 제시되어야 보다 바람직한 민주주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차후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원리가 교과서에 조화롭게 구현되는 데 본 연구가 단초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동기 및 목적	1
2. 연구방법 및 구성	4
3. 연구의 한계	6
II. 기존연구 검토 및 이론적 배경	8
1. 사회과 교육에서의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관련 기존연구	8
2.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에 관한 이론들	12
1)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	12
2) 공화주의에 대한 논의	19
3. 소결: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핵심원리	24
III. 교과서 내용분석 설계	27
1. 분석대상	27
2. 분석준거 및 설계	30

IV. 주요 분석결과	37
1.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관련 내용의 양적 분석	37
1) 관련 주제별 교과서 비중	37
2) 관련 핵심용어의 빈도분석	41
2.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관련 내용의 질적 분석	44
1) 통치원리	44
2) 제도적 특성	48
3) 운영원리	52
4) 정치문화	54
V. 결론 및 제언	59
1. 연구결과 요약	59
2. 제언	61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 차

〈표 1〉 10학년 사회교과서 내용체계표	28
〈표 2〉 분석대상 교과서 및 단원명	29
〈표 3〉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관련 내용요소	33
〈표 4〉 교과서 내용분석 준거	34
〈표 5〉 교과서의 양적 분석양식	35
〈표 6〉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주제에 따른 내용 비중	38
〈표 7〉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관련 핵심단어의 빈도	43
〈표 8〉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통치원리 관련 서술 예	44
〈표 9〉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제도적 특성 관련 서술 예	48
〈표 10〉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운영원리 관련 서술 예	53
〈표 11〉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정치문화 관련 서술 예	55

I. 서 론

1. 연구의 동기 및 목적

현재 우리나라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의 국호를 나타냄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정치체제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라는 양대 사상이 결합되어 있음을 천명한 것이기도 하다. 또한 ‘민주’와 ‘공화’라는 용어가 헌법에 최초로 명시되었던 1914년 대한민국 임시헌장 이후부터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민주공화국’이라는 국가정체는 한 번도 포기된 적이 없이 유지되어 왔다.

권위주의 독재체제에 맞선 지난한 투쟁과정에서 “국민에 의한 지배와 통치”라는 핵심원리로서 민주주의는 폭넓게 공유되었고 그에 따른 민주주의 담론은 넘쳐난 반면, 정치체제의 나머지 한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공화주의는 그 자체가 갖는 내용적 풍부성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세습군주가 지배하는 국가가 아니라는 ‘비군주국’이라는 협소한 의미 외에는 제대로 된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공화주의의 핵심원리 등도 민주주의의 이념이나 내용에 포섭되어 취급되면서 공화주의는 민주주의의 또 다른 용어쯤으로 간주되었다.

87년 민주항쟁 이후 절차적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실질적 민주주의까지 달성한 한국의 민주주의가 최근 위기를 맞았다는 진단이 폭넓게 형성되면서 그 보완책으로 공화주의 원리가 다시금 조명 받고 있다.

진보진영에서는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하에서 ‘경쟁’과 개인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자유주의의 강조가 ‘사회적 양극화’를 유발시켰고 파편화된 시민이 정치참여에서 소외됨으로 인해 민주주의의 위기가 야기되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보수진영에서는 민주화 이후 계속 확대되어 온 민주주의는 이성보다 감정에 지배되는 민주주의의 과잉 또는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강조되는 과도한 참여로 인한 피로에서 민주주의의 위기가 비롯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어찌되었든 ‘민주주의 위기’라는 현상에 대한 진단은 진보와 보수 양진영에서 정반대의 입장으로 제기되었지만 최근 한국 민주주의 보안을 위한 공통된 처방은 ‘공화주의’ 가치에서 찾으려 한다는 점이다.¹⁾ 일반적으로 공화주의는 세습적 권력을 지양하는 비군주국을 표방하면서 권력의 독점으로 인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권력의 견제와 균형, 법에 의한 통치, 심의를 통한 대의제의 선호와 공공선의 추구하고 시민의 덕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 동안 우리 교육에 있어서도 민주주의에 관한 내용은 차고 넘치는 반면 공화주의(共和主義)에 관한 내용은 빈약한 것이 현실이다. 또 하나는 앞서 언급한 공화주의 핵심원리로 여겨지는 것들도 민주주의 원리로 뭉뚱그려 교육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과 교육이 바람직한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치·태도를 함양시킨다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혼재되어 있는 민주주의 원리와 공화주의 원리가 균형 있게 다루어질 필요가

1) 한국 사회에서 공화주의 가치에 대해 재조명하는 연구들로는 장은주(2012), “한국 진보적 자유주의 전통의 민주적-공화주의적 재구성”, 사회와철학연구회, 『사회와 철학』 제23호; 박준혁(2008), “왜 그리고 어떤 공화주의인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아세아연구』 제51권 제1호 통권131호 (2008년 3월); 양해림(2008), “한국사회에서 공화주의의 이념은 부활할 수 있는가”, 『시대화 철학』, Vol.19, No.1; 이동수(2007), “민주화 이후 공화민주주의의 재발견”, 『동양정치사상사』. Vol.6, No.2; 임채원(2007), “한국형 공화주의로 사회적 대타협을”, 월간 『말』, 2007; 정원규(2002),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절차주의적 공화민주주의의 모델을 제안하며” 철학 제 71집, 2002.5 등 참조.

있음은 물론이다.

본 연구는 최근 공화주의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사회과 교육, 특히 정치교육이 민주주의 교육내용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공화주의 원리에 대한 교육은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또한 우리나라가 민주공화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듯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원리는 함께 교육되어야 하며 민주주의의 심화와 발전은 공화주의의 원리에 의해 보완·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현행 2009년 개정 교육과정 사회교과서 정치단원에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원리가 어떤 비중과 내용으로 구현되고 있는지 그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밝히고, 앞으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원리가 교과서에 충실하게 집필될 수 있는 데 있어 몇 가지 바람직한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정치단원에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가치와 관련된 내용은 각각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

둘째,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정치단원에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핵심원리는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그 내용은 충실하게 다루어지고 있는가?

셋째, 사회교과서의 정치단원에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원리가 조화롭게 구현되기 위한 바람직한 집필방향은 무엇인가?

2. 연구방법 및 구성

본 연구는 고등학교 사회교과서 중 일반사회 영역의 ‘VIII. 정치 과정과 참여 민주주의’ 단원을 대상으로 내용분석법(contents analysis method)²⁾을 이용하고자 한다. 내용분석법은 문자나 언어 등 상징적 의사전달 수단으로 되어있는 기록물을 일정한 분류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기법으로 분석대상은 서적이거나 신문, 잡지 등의 텍스트 문서나 시각자료 등의 비언어적 매체 등이 포함된다.

크리펜도르프(Krippendorff)는 내용분석법에 대해 "명시적인 부호와 규칙을 바탕으로 텍스트에 있는 다수의 낱말들을 소수의 범주로 압축하기 위한 체계적, 반복적 기술"이라 정의했으며, 홀스티(Holsti)는 "메시지의 구체적 특징들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여러 가지 추론을 만들어 내는 어떤 기술"로 정의하고 있다(김석우·최태진 2011, 348). 내용분석법은 애초 대중매체의 의사소통 내용을 분석하는 기법으로 출발하였지만 그 연구방법의 효용성으로 다른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활용되는데, 교육분야의 경우 교과서나 교육 프로그램 등의 내용 분석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내용분석의 특징은 기록물의 다양한 표현 내용을 객관적인 체계에 따라 수량적으로 변형시키는데, 주로 단어, 주제, 성격, 항목, 시·공간 등이 분석단위이다. 본 연구에서의 양적 분석은 일차적으로 문장을 분석단위로 하여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관련한 '주제'를 기준으로 중심주제가 민주주의 내용인지, 공화주의 내용인지 가려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내용

2) 내용분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Earl Babbies 지음, 고성호 외 공역(2002), 『사회조사방법론』, 도서출판 그린, pp. 386-399; 김석우·최태진 공저(2011), 『교육연구방법론』, pp. 347-364, 이종승,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pp. 324-329 등 참조.

이 정치단원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도록 한다.

2차적인 수량 분석으로는 단어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원리에 해당하는 핵심 용어를 선별하여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관련 요소로 어떠한 용어가 주로 출현하며 그 빈도는 각각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특정용어의 출현 분석만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분석은 교과서에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원리 중에 어떤 내용이 주로 다루어지고 있는지 수량적으로 파악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아울러 텍스트의 내용을 수량화하는 양적 분석에서 놓칠 수 있는 교과서 내용에 담긴 암묵적인 내용과 맥락에 숨어있는 내용을 해석해보는 질적 연구를 병행함으로써 사회교과서에 제시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원리의 교육적 관련 정도와 편향정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설계는 Ⅲ장에서 자세히 논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Ⅰ 장 서론에서는 앞서 밝힌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연구에 대한 필요성, 내용분석법을 활용한 연구방법의 소개와 본 연구에 있어서의 한계점을 명시하고자 한다.

Ⅱ 장에서는 사회과 교육에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와 관련하여 기존에 수행된 연구들의 내용을 검토해 보고,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기원과 고전적 차원에서의 의미, 이후 전개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현대적 의미를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 민주주의나 공화주의에 대한 시각은 시대와 학자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이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통해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다양한 논의들에서 각각 공통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 핵심원리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Ⅲ 장은 본 연구에서 수행할 교과서 내용의 분석설계를 제시한다.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중에서 정치관련 단원을 선정한 이유, 정치단원인 ‘VIII. 정치 과정과 참여 민주주의’의 내용구성을 살펴보고 교과서 내용 분석에 필요한 준거를 설정한다.

IV장에서는 III장의 분석틀을 기반으로 한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교과서 내용에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주제의 비중 및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관련 핵심용어를 선정하여 주제에 따른 문장 수와 관련 핵심용어의 빈도수를 기준으로 한 양적 분석과 관련 내용을 맥락을 추론하여 분석하는 질적 분석을 병행하여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V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교과서 내용분석을 통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원리에 대한 교과서 내용의 문제점을 진단해보고자 한다. 더불어 바람직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교과서 서술방향에 대해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3. 연구의 한계

본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음의 몇 가지 한계를 갖는다는 점을 밝힌다. 첫째, 본 연구는 현행 2009 개정 교육과정 중 10학년 사회교과서의 정치영역 단원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일반적으로 사회과 교육의 목표는 사회문제와 참여에 필요한 지식, 기능, 가치·태도, 시민행동 등을 함양하는 것(차경수·모경환 2009, 64-70)인데, 사회·문화나 법 등 다른 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와 관련 교육내용은 제외하고 있어 사회과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관련 교육내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교과서의 본문의 서술내용과 탐구활동만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읽기자료나 기타 심화활동 등은 제외하였기 때문에 읽기자료나 기타 활동을 통해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교육에 대해 보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은 고려하지 않았다.

셋째, 정치사상으로서 공화주의 원리와 민주주의 또한 그 이해에 있어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고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내용이 논의에 따라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도 있어 두 이념 간의 원리를 엄격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에 대한 고전적 의미와 현대적 의미, 학자들에 따른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원리의 이해에 다소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두 원리를 분석하는 단위를 변별하고 추출하는데 있어 어느 정도 자의적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넷째, 맥락단위로 분석하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복합적인 내용의 텍스트를 연구자의 주관적 시각이 개입되어 과도하게 단순화시킬 수 있어 객관성이 결여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Ⅱ. 기존연구 검토 및 이론적 배경

1. 사회과 교육에서의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관련 기존연구

현재 사회과 교육에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와 관련하여 진행되는 교육 연구 성과들을 보면 역시 민주주의와 연관된 연구가 압도적이다. 민주주의와 교육에 대한 연구는 크게 세 범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민주주의 교육의 철학적 사상,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내용분석, 민주주의에 입각한 민주시민성 교육에 대한 연구가 그것이다.

민주주의 교육의 철학적 사상은 주로 교육학자인 듀이(Dewey)의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듀이는 민주주의를 단순한 정치형태만이 아니라 생활형태의 한 형식으로 이해한다. 듀이는 민주주의 사회의 기준으로 '의식적으로 공유되는 관심의 수와 종류가 얼마나 다양한가'와 '다른 공동생활과의 상호작용이 얼마나 풍부하고 자유로운가'의 두 가지를 상정하고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들은 개인의 독창성과 적응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한다(존 듀이, 이홍우 역 2007, 155). 이러한 듀이의 민주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 교육에서의 함의를 찾고자 하는 철학적 연구가 대표적이다(이주한 2009).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내용분석으로는 정치단원에서 표방하고 있는 '참여 민주주의'적 관점이 어떻게 교과서 내용에서 구현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있다(김영인 2002; 박가나 2012). 이들 연구는 참여 민주주의 관점에서 참여 민주주의 내용이 교과서에 늘

어난 만큼 참여를 위한 의식과 프로그램의 개발의 필요성, 학습활동의 다양성을 강조한다.

사회과 교과서에서 민주주의의 특정원리가 다루어지는 내용에 대한 비판적 연구도 있다. 전제철(2006)은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민주주의 원리인 '국민주권'의 원리를 분석하고 국민주권의 원리를 단순히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거나 주권자로서 국민은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여야 한다고 교육하는 것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대의제를 국민의 직접적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비민주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국민주권의 의미를 헌법적 관점에서 전달하지 못하고 정치교육에 치우쳐 다루어지는 결과라고 비판한다.

한편, 민주주의에 입각한 시민성 교육은 민주시민으로서의 갖추어야 할 자질을 민주주의의 제도와 이념 속에서 이해시키고 교육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주주의와 시민성 교육에 대한 비교 연구로는 서현진(2012)의 연구가 있다. 민주주의가 심화되면서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정치교육이 강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그동안 독립되었던 고등학교 '정치' 과목이 '법과 정치'로 통합되었다. 그는 민주화 전후의 고등학교 정치교과와 내용변화를 고찰하고 대폭 축소된 고등학교 정치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한다. 이를 위해 미국의 정치교과와 학습내용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미국 정치교과는 보편적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자국의 특수성, 시민성과 시민의 역할 및 참여에 대한 충실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는 반면 한국은 보편적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한국 민주주의의 특수성, 민주시민으로서의 참여 능력에 대한 학습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이에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민주적 시민교육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정치사회적 환경에 상관없이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민주주의 교육이 이

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편 공화주의 연구는 철학, 사학, 법학 등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교육 분야에서는 아직 미미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사회과 교육계에서는 시민(성) 교육에 있어 공화주의 원리를 접목하려는 일련의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서재천(2007)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각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추구 현상으로 인해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성격이 현저히 약화되었다고 진단하고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Dagger의 '공화주의적 자유주의' 논리를 제시하였다. 그는 개인과 공동체의 양립가능성을 도출한 Dagger의 공화주의적 자유주의 논리에 비취볼 때 우리나라의 시민성 교육이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에 대한 존중과 더불어 공화주의적 요소도 함께 강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상현·김희용(2010)은 현대 공화주의의 '비지배로서의 자유'의 개념을 검토하고 개인이 아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시민을 길러내기 위한 교육을 공화주의 관점에서 모색한다. '비지배로서의 자유'란 타인으로부터 어떤 임의적인 간섭 없이 자유롭게 행동하는 한에서 자유로운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적법한 제도에 의한 간섭은 오히려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제로서 작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화주의에서 시민권 개념은 상호의존, 호혜성, 동료에 대한 의무감을 포함하는 것으로 시민이 더 이상 권력의 담지자가 되지 못하고 파편화된 개인으로 전락한데서 야기된 민주주의 위기 현상의 확산을 제어하는데 공화주의적 시민교육이 그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미순(학위논문, 2010) 역시 민주화 이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의 분열에 대한 해답을 '공화주의' 사상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는데 동의한다. 공화주의에서 강조하는 '법치, 공공선의 모색, 관용과 타협, 공화

주의적 애국'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요청되는 덕목이며 사회과 민주 시민 교육이 지향하는 바와도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2007개정 교육과정의 『정치』 교과서 4종을 분석했는데, 그 결과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대의제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대표를 구성하여 공공선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연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대의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극복방안을 '직접 민주주의의 강화'를 통해서만 해결 가능하다는 결론을 천편일률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사회과 교과서에서 공화주의가 갖는 교육의 철학적 기초를 모색하고자 하는 시도는 김홍탁(학위논문, 2012)의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에 천명된 '민주 공화국' 내용을 제1차 교육과정에서부터 2009개정 교육과정까지의 고등학교 정치 관련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민주 공화국의 내용과 비중이 제1·2차 교육과정에서 압도적으로 높고, 제5차 교육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낮아졌다고 파악한다. 또한 민주 공화국의 개념이 줄곧 주권이 세습적 군주가 아닌 국민에 있는 '비군주국'이라는 국가형태를 가리키는, 상당히 형식적인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대로 사회과 교육에서 민주주의 관련 연구는 철학, 원리, 시민교육 등 다양한 시각에서 상당한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 반면에 공화주의를 사회과 교육과 연결하여 논한 기존 연구는 손에 꼽을 정도이고 그 관심도 저조하다. 그러한 와중에 최근 공화주의와 관련하여 선행된 연구들의 공통된 결론은 사회과 교육에서 시민성을 고양하기 위한 시민교육에 공화주의가 나름의 함의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 역시 민주주의 교육만큼이나 공화주의 교육이 사회과에서 수

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과는 차별화된 나름의 의의가 있다면 특정 정치원리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에 제시되어 있는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이념이 모두 중요하며, 정치단원에서는 이러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내용이 동시에 구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이다.

그리고 사회과 교육에서 공화주의 교육 역시 필요하다는 당위성에서 한발 더 나아가 현행 사회교과서의 교육내용 중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내용이 어떠한 비중과 내용으로 제시되고 있는지 교과서의 내용의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그 동안 온전히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리로만 이해되었던 원리들도 공화주의 원리로서 교육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앞으로 사회과 교육에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내용이 바람직하게 서술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2.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에 관한 이론들

1)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

오늘날 민주주의는 전 지구적으로 보편적이고 가장 이상적인 정치신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각 국가들은 이념과 체제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민주주의 국가를 표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간접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대의제 민주주의, 참여 민주주의, 심의(숙의) 민주주의 등 다양한 가치들과 결합

된 민주주의의 종류만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한편 과거 파시즘이나 파시스트의 경우와 같이 비합리적인 체제도 ‘민주주의’라는 이름하에 옹호되기도 하였고, 심지어 북한과 같은 세습독재 국가에서도 민주주의를 자처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정쟁(政爭)과정에서 상대를 비난할 때 ‘반민주적’이란 낙인을 찍음으로써 스스로는 민주적이라고 정당화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정작 "민주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에는 쉽게 정의내리지 못하는데, 이는 민주주의가 갖는 ‘다의성(多義性)’에서 비롯되는 현상이다.³⁾ 오늘날 사회과 교육이 민주주의 교육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민주주의에 본질에 대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민주주의에 대한 주요 이론가들의 견해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의 개념, 민주주의의 원리, 민주주의의 특징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① 고전적 민주주의 이론

민주주의(democracy)라는 어원은 고대 그리스 역사가인 헤로도투스(Herodotus)가 민중을 뜻하는 **demos**와 권력(지배)을 뜻하는 **kratos(kratein)**를 결합하여 처음 사용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민주주의는 권력이 한 사람이나 특정계급에 귀속되는 군주정치

3) 민주주의라는 용어의 다의성에 대해 엘리엇(T. S. Eliot)은 “민주주의와 같이 세계적으로 신성화된 낱말은 그 다의성 때문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되었다”고 지적한바 있으며, 백커(Carl L. Backer)는 “민주주의는 약간만 조작하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사회적 사실을 집어넣고 다닐 수 있는 일종의 개념상의 여행용 가방”이라며 민주주의에 대한 현명한 논의를 위해 민주주의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사토리(Sartori)는 ‘자유주의’나 ‘사회주의’에 대한 정의보다 더 어려운 것이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라면서 그 이념과 제도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생존할 수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범준·신승권(1995), 『정치학』, 박영사, p. 254.

나 귀족정치와 구별되는 ‘대중의 통치’가 보장된 정치형태를 가리키는 것이다.

기원 전 6세기 그리스 아테네의 클레이스테네스(Cleisthenes)는 독재자의 가능성이 있는 인물을 비밀투표를 통해 몰아내는 도편추방제를 도입하였고, 아테네의 시민들에게 정치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를 약속하면서 그리스 민주주의의 기틀을 닦았다. 그리고 기원전 5세기 페리클레스(Pericles) 시대에 이르러 아테네 민주주의는 절정기를 맞았다. 당시 아테네의 직접 민주정치는 시민들은 이세고리아(isegoria)라는 ‘동등한 발언권’이 보장된 토론을 통해 국가정책을 결정하였고, 민회나 법정의 구성원은 추첨제와 윤번제를 채택하면서 관직배분에 있어서도 평등한 정치참여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였다(윌리엄 포레스트 지음, 김봉철 옮김, 2009). 그리고 이러한 관직에서의 추첨과 윤번제라는 선출방식은 주기적인 권력의 교체로 특정 전문가의 독점을 차단하기 위한 기제로 작용하였다. 아테네 민주주의자들은 절박한 상황이 아니면 정치적 문제는 비전문가에 의해서 충분히 수행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오히려 민주정과 전문성은 서로 상충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정치가 전문가 중심으로 독점되는 것에 대해 경계하였다(버나드 마넵, 곽준혁 옮김 2004). 이러한 아테네 직접 민주주의 원칙은 정치참여에 있어서의 평등, 국민의 토론정신, 정치지도자에 대한 견제로 요약될 수 있다.

아테네 멸망 이후 긴 공백기를 거쳐 민주주의는 18-19세기 서구 역사 전개과정에서 새로운 정치이론으로 재등장하게 되었고 20세기에 이르러 발전하게 된다. 근대 계몽주의 사상가인 로크(Locke)는 그의 저서 『시민정부론(Second Treatise of Government)』에서 국민의 자발적 계약으로 형성되는 제한정부론을 주장하였다. 로크에게 있어 자연 상태는 신에 의해 제정된 자연법 하에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하게

존재하는 상태이다. 특히 노동의 결과물에 대한 사적 소유권이 중요한데, 자연 상태 속에서는 이러한 개인의 생명과 자유, 사적 소유권을 항상적으로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불가양적(不可讓的) 권리의 확실한 보장을 위해서는 암묵적이고 명시적인 사회계약에 의해 정부를 조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계약으로 구성된 정치사회에서의 모든 결정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또한 인간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구성된 정부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사회구성원에 의해 다시 구성될 수 있다는 저항권 개념을 인정하고 있다(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공저 2010, 56-57). 로크의 사상은 국가에서의 주권재민 사상, 국민의 기본권 인정, 다수결의 원칙, 저항권의 인정 등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영국의 시민혁명과 미국의 독립혁명 등에 영향을 주었고 현대 민주주의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로크의 민주주의 사상은 미국의 제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T. Jefferson)에게 계승되었다. 제퍼슨은 미국 민주주의 전통을 확립한 이론가로 알려져 있는데, 그는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기초하면서 로크의 주권재민 사상을 계승하여 ‘국민주권의 원리’로 발전시켰다. 또한 가끔 발생하는 반란은 “정부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약”이라며 비민주적 통치자에 대한 저항권을 인정하였다(이범준 · 신승권 1995, 269).

한편 미국 헌법 제정 당시 공화제 정부형태라는 것은 직접민주제가 아니라 대표자를 매개로 하는 대의제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현실적으로 대의제가 필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제퍼슨은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은 권한을 확대 행사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가능한 한 인민에 의한 지배라는 원리가 최대한 지켜지도록 운용되어야 한다”는 신념에서 대의제는 제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여겼다(이병규 2010, 73). 제퍼

슨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로 의사결정 방식으로는 다수결의 원리와 이러한 원리가 합리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조건으로 토론의 자유를 강조한다. 제퍼슨은 다수의 의견이 전체의 의견으로 결정되면 1표라도 많을 경우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다수결의 원리가 무시된다면 사회는 폭력이 작용하는 군사적 전제군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역설한다(이병규 2010, 76). 더불어 그는 민주주의의 구성요소로 선거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선거권을 국민의 중요한 기본권으로 인식하면서 통치권자에 의한 선거권 박탈의 위험성을 경계하였다(이병규 2010, 81).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라는 게티즈버그 연설로 유명한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링컨(A. Lincoln)은 미국 민주주의의 실천가로 평가받는다. 그의 연설내용은 흔히 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한 정수(精髓)로 자주 인용되는데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는 각각 국민주권, 국민자치, 국민복리 혹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치를 가리키다. 링컨은 특히 민주정치의 중요한 요소로 다수결의 원칙을 강조하였다(이범준 · 신승권 1995, 270).

② 현대 민주주의 이론

고전적 의미에서의 민주주의가 지향해야 할 이념성이 다소 강했다면, 현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는 주로 제도적, 절차적 정치운영의 개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슈페터(Joseph A. Schumpeter)는 그의 저서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 하에서 모든 사람들이 의견일치를 이룰 수 있는

규정된 공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민주주의란 정치적 결정에 도달하기 위해 개개인이 국민의 투표를 획득하기 위한 경쟁을 함으로써 권력을 얻는 제도적 장치”이다. 그에 따르면 민주주의는 단지 정부를 선택하고 권위를 부여하는 장치에 불과하며, 이러한 장치에서 둘 이상의 정당에 소속된 엘리트 집단 간에 통치권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이 선거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 과정에서 투표자는 소비자이고 정치인은 기업인이며 이러한 정치적 재화의 제공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제도가 민주주의이며 수요와 공급이 균형이 될 때 안정된 정부가 출현한다(조지프 슈페터 지음, 변상진 옮김, 2011, 479).

달(Robert A. Dahl)은 민주주의란 소수자에 의한 지배체제를 의미하는 올리가키(oligarchy, 寡頭政)의 반대로서 사실상 다수가 지배하는 지배체제인 폴리아키(polyarchy, 多頭政)의 개념으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하는 정치체제이다(이극찬 2004, 540). 특히 달은 민주주의에 있어 시민의 권리로 첫째, 자신의 요구를 명확하게 공식화시킬 기회 둘째, 모든 투표는 동등하게 간주되어야 할 기회, 셋째 그 요구를 개인적 내지 집단적 행동을 통해 명시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로버트 달 지음, 김왕식 옮김, 2009). 그는 특히 정치적 평등을 강조했는데 사회의 불평등은 정치적 자원의 배분과 불만의 표출이라는 두 가지 면에서 정치체제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사회나 불평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자원에 있어서 보충할 수 있는 기제가 마련된다면 폴리아키는 상당기간 존속이 가능하다(로버트 달 지음, 김왕식 옮김, 2009).

바커(Ernest Baker)는 민주주의를 다수결의 원칙 하에서 소수가 정치하는 정부형태로 보았다. 그는 각 개인은 사회의 일반적 문제에 대해 견해를 표명할 권리와 정책결정을 위한 토론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결국 국민의 정치적 평등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는 또한 민주주의의 원리로 주기적인 선거를 통한 정치지도자의 교체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 선거에는 보통·평등·직접·비밀의 4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개인의 정치행위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 가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이극찬 2004, 498-500; 이범준·신승권 1995, 259).

맥키버(R. M. MacIver)는 민주주의는 “통치방식이 아니라 통치자와 통치목적에 결정하는 방식”이며 민주주의가 다른 정부형태와 다른 점은 토론과 투표를 통한 국민의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곧 ‘여론통치’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이범준·신승권 1995, 260). 그는 민주주의의 지표로 다음의 다섯 가지 물음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정부시책에 대해 자유롭게 전적으로 반대여사를 표명한다 할지라도 그전과 다름없이 심신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 둘째 정부시책에 반대되는 정책을 표방하는 조직을 자유롭게 조직할 수 있는가, 셋째 집권당에 대해 자유롭게 반대투표 할 수 있는가, 넷째 만일 집권당을 반대하는 투표가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었을 경우, 그 투표로써 정부를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결정짓는 선거가 일정기간 또는 일정 조건 하에서 실시될 수 있는 입헌적인 조치가 되어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중 어느 것 하나라도 ‘아니오’라고 한다면 그 체제는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단언한다(이극찬 2004, 521).

2) 공화주의에 대한 논의

주지하다시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을 표방하고 있는데,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공화국 또한 자처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 이념과 더불어 공화주의 가치가 합쳐진 국가정체의 보편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공화주의가 민주주의의 확산과 발전에 있어 결합시킬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사상적 조류임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화주의(**republicanism, 共和主義**)라고 하면 ‘왕에 의한 통치가 아닌 것’ 혹은 ‘여러 사람에게 의한 집단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거나 민주주의와 거의 동일시하여 이해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비틀리는 17-18세기 공화주의가 민주주의 국가의 탄생과 강화에 기여했으며, 오히려 민주주의 사상이 고전적 공화주의의 속주라고 지적하기도 한다(모리치오 비틀리 저, 김경희 옮김, 2006, 42).

민주주의와 마찬가지로 공화주의 역시 시대와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간단히 정의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는 또 다른 속성을 내포하고 있다. 공화주의는 그 어원인 ‘**res publica**’가 ‘공공의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개인보다 공동체(조국)를 위한 헌신, 사적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 우선, 이를 위한 전제로 시민의 덕성을 중시한다.

사회과 교육에서 행해지고 있는 공화주의 교육 내용을 분석하기에 앞서 공화주의에서 강조하는 가치와 원리 등에 대한 논의를 공화주의 이론가를 중심으로 좀 더 자세히 고찰해 보고자 한다.

① 고전적 공화주의 이론

고전적 의미의 공화주의를 기초한 학자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

스토텔레스(Aristoteles)이다. 그는 저서 『정치학』에서 선한 정치체제란 모두의 공공선을 추구하는 왕정, 귀족정, 민주정이며 이것이 공공의 이익을 배제할 때 각각 참주정, 과두정, 폭민정으로 타락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단일한 형태의 정체가 갖는 위험성을 피하기 위해서는 혼합정체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김상현 2009, 12). 아리스토텔레스의 혼합정체론에 대한 사유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몰락에 기인한다. 아테네 민주정에서 인민은 참여의 자유와 동등한 발언권을 통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무지한 대중에 의한 통치는 무질서를 초래하였고 이러한 과도한 ‘데모크라티아’는 아테네의 몰락으로 이어졌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민주정이 과도한 참여정치로 인해 폭민정으로 타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인들에 의한 정치를 주장하였다(이범준·신승권 1995, 262-263).

키케로 또한 대표적인 고전적 공화주의자이다. 그는 카이사르에 맞서 쇠퇴하는 로마 공화정을 지키려 노력하는 일념에서 공화주의를 강조했다. 그는 공화국을 법과 공공선에 기반을 두고 주권자인 시민들이 만들어낸 정치 공동체이며 이때의 공화국이란 아무렇게나 모인 일군의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공공이익을 인정하고 동의한 사람들의 모임”으로 정의하였다(모리치오 비톨리 저, 김경희 옮김 2006, 15). 그 역시 아리스토텔레스와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순수한 정부형태는 존재할 수 없으며 혼합정체를 가장 최선의 정체로 파악했으며 너무 많은 지배적인 역할을 인민에게 부여하는 것은 정체가 타락할 위험성이 있다며 인민의 역할을 제한적으로 인정하였다(김상현 2009, 16-18).

또한 사회는 동등한 사람들의 연합이 아니라 계급과 지위, 부자와 빈자, 평민과 귀족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정부는 공통된 이익에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계급의 인민들은 그들의 공통된 이익을 상호 존중하

면서 공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공화국에서의 가치는 덕성을 갖춘 시민에 의한 시민권 행사에 있다. 그 역시 법에 의한 지배를 강조하였는데 "인간은 그가 가진 것을 최대한 능력을 개발할 때, 모든 동물 중에서 최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법과 정의로부터 유리된다면 모든 동물 중에서 최악이 된다"면서 법의 지배에 의해 통치자를 포함하여 사회의 모든 계층의 지배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김상현 2009, 20).

마키아벨리 역시 고전적 공화주의자로서 계승한 독특한 공화주의를 발전시켰다. 그 역시 혼합정체를 선호하였으며 세 가지 선한 정체의 장점을 결합한 혼합정체(감시와 견제, 균형)에서의 갈등과 긴장관계가 최고의 정책을 산출하고 공화국 유지에 기여한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인민의 역량과 공동체에서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과도한 정치 참여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다(김상현 2009, 27).

그는 극단적 이기주의의 결과인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현상이 벌어지는 이유에 대해 권력과 재산 등의 정치·사회적 재화를 더 많이 소유한 이들이 경쟁의 공정한 룰이나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될 정도로 힘이 센 불평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러한 사회에서는 가난하고 낮은 계층의 사람들은 능력이 있어도 성공할 수 없고, 당연히 누구도 공동체와 공익을 위해 일하지 않을 것이며, 사회에 대한 주인의식과 책임의식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한 경우 공공선에 대한 의식에서 생성되는 공익적 질서는 소멸되고, 사회 구성원들은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키기보다 부정한 방법으로 권력이나 부를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평등과 부패와 혼란을 극복·해소하고, 인민이 공동체를 위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질서와 공정한 룰을 수립해내야 하는데, 이는 사회가 한 계급에 의해 일방적으로 지배당하지 않은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공공의 이익 내지는 공공선 이념이 탄생하는 공간이자 시민적 덕성이 재생산되는 공간으로서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정한 제도와 공공적 질서의 확립이 중요한 것이다. 다시 말해 공화주의는 평등주의의 사회적 구현을 통해 공익적 질서의 구축과 이를 자발적으로 지키는 시민적 덕성으로 이룩될 수 있는 것이다(김경희 2011, 92).

한편 루소는 기존의 사회계약론과는 다른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사회계약론을 발전시켰다. 그에 따른 정의로운 사회란 공공선, 즉 사회공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일반의지가 지배하는 사회다. 루소의 공화주의의 특징은 사회불평등의 원인을 사유재산제로 파악했으며 "공화주의에 걸맞은 나라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을 팔아야 할 정도로 가난해서는 안 되며, 어느 누구도 남을 살 수 있을 정도로 부유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함으로써 공화주의를 한층 격상시켰다고 할 수 있다.

루소는 공화국의 특징으로 특히 법치를 강조하였는데, "자유로운 인민은 오직 법에만 복종하며, 타인에게 예종하도록 강제할 수 없는 것이 법의 힘"(모리치오 비틀리 저, 김경희 옮김 2006, 12)이라 정의하였고 또한 이러한 법치주의에서의 공공선을 강조하였다. 그는 공화국이라는 정부형태에 대해서도 "나는 정부형태가 어떤 것이든 간에 법에 의해 통치되는 모든 국가를 공화국이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이때 비로소 공공선이 우위에 서고 공공의 것이 중요한 것이 되기 때문"이라고 정의한다(모리치오 비틀리 저, 김경희 옮김 2006, 15-16).

② 현대 공화주의 이론

현대적 의미의 공화주의는 미국의 건국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세습적 권력을 기반으로 하는 왕정으로부터의 독립을 쟁취하면서 왕정과 차별화되는 정치제체를 형성시킬 필요가 있었던 미국 정치인들은 민주주의와 더불어 공화주의 원리를 탐색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공화주의자로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의 한 명인 매디슨을 들 수 있다. 그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향수를 비판하면서 대중이 때로는 충동적인 군중 심리에 휩싸여 전체 공동체의 이익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정에 도달하기도 한 것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그는 대의제와 민주주의를 대립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아테네의 민주정보보다 공화주의적 대의정이 집단적 대중의 거친 에너지를 분할하여 공공선에 적합하게 순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더 우월한 것으로 파악하였다(안병진 2008, 174).

그는 모든 사람 또는 모든 계급의 이익과 관계되는 결정을 하기 위해 인민을 대표해 대표자들이 공공 이익에 도달하기 위해 신중하게 숙고하여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 정치 의사를 결정하는 심의체제를 지닌 대의제를 보다 적합한 것으로 보았다(이동수 2005, 8). 이런 이유로 매디슨은 대의제를 민주주의라고 부르지 않고 아테네의 민주제와 구별하기 위해 '공화제'라고 불렀다. 아테네의 민주정치는 데모스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민주정치에서는 데모스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계급 지배가 가능하지만, 공화정치에서는 공공 이익을 추구해야 하므로 계급지배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모든 사람의 또는 모든 계급의 이익에 봉사한다는 것이다(김주성, 2008).

필립 페티(Philip Pettit) 미국 프린스턴대 정치학과 교수는 최근 신공화주의 연구로 주목받는 학자이다. 그는 로마공화국으로부터 공화주의의 전통을 찾으려는 신로마공화주의자로 분류되는데⁴⁾ 그는 강력한 다수를 불신하였는데, 공화주의에서의 참여 확장을 선호하면서도 일정한

정도의 제한이 따르는 수단적 의미의 참여이며 어떤 결정에는 참여가 제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김상현 2009, 135). 그는 다수결에 의해 개인의 자율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되며 심의기제를 통해 공공선이 구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다수의 폭력을 비롯한 그 어떤 형태의 자의적인 권력행사를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에 법에 의한 지배를 강조하였다(곽준혁, 필립 페티 2009, 105, 110-111).

3. 소결: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핵심원리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에 대한 논의는 서구의 경험과 역사적 경험을 거치면서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다. 그렇지만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에서 각각 본질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고대부터 현대까지 주요 이론가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이론가들마다 그 정의에는 차이가 있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보면 공통적인 원리를 추출할 수 있는데, 크게 국민주권, 정치적 평등, 다수결의 원칙, 토론을 통한 협의의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국민주권은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권력이 1인, 혹은 소수에 집중되는 군주정과 귀족정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다수가 정치에 참여하는 정치형태이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뿐만 아니라 현대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행해지는 민주주의는 그 정치적 권력이 민중의 힘에서 기인한다. 국

4) 현대 공화주의에 대한 논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공화주의에서 공화주의적 가치를 찾으려는 시민적 공화주의와 로마공화정에서 공화주의의 가치를 찾으려는 신로마적 공화주의로 분류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공화주의에 대한 대표적인 학자들의 논의를 소개하는 차원에서 두 공화주의 논리 간의 논쟁은 생략하고자 한다.

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를 국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이며, 그것이 설사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민의에 의해 결정이 되었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이다. 반면 국민을 위한 정치적 결정이라도 다수의 의사가 아닌 1인 혹은 소수에 의해 결정되었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정치 혹은 과두정치인 것이다.

그러한 정치적 결정에 있어 국민들은 정치적 평등을 보장받는다. 지위나 계급, 재산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국민은 1인 1표의 동등한 투표권을 부여받는다. 민주주의는 정치적 결정에 있어 소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다수결에 의한 대중의 힘이 모여 구현되는 가치이기 때문에 '참여'는 공화주의보다 더 강력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민주권의 원리와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소수의 의견은 무시될 수 있는 다수 독재의 위험성이 상존한다. 마지막으로 다수의 의견에 도달하기 위한 토론을 통한 국민적 합의를 선호한다. 여기서는 토론에 참여하는 주체들은 발언에서의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는다.

한편 공화주의의 원리는 권력분립, 법치주의, 대의제 선호, 공익 추구, 시민적 덕성의 강조로 요약할 수 있다.

공화주의적 전통은 특정 일인이나 권력 집단에 의한 단일지배를 지양하고 사회적 힘과 권력기구가 균형을 이루는 '혼합정체'를 선호하는 특성을 지닌다. 이는 오늘날 입법, 사법, 행정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는 제도의 권력분립의 형태로 나타난다. 또한 국가와 인민의 권력을 제도적으로 한정해야 할 필요성은 법에 의한 합리적 지배로 나타나며, 다수 대중의 불만과 반감을 해소할 수 있는 기제 역시 법의 지배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는 오늘날 법치주의의 원리이며 공화주의의 가치에 그 기원에 맞닿아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화국을 독재와 부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 규정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지혜로운 역량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민 윤리와 시민의 덕성을 강조하는 것은 공화주의가 다른 정치사상과 특별히 구분되는 특징이기도 하다. 시민은 능동적 의무로서 공공의 역할을 이행하며 선출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도덕적 책임성의 윤리를 함축하고 있으며 지배역량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복종의 능력도 필요로 한다.

마지막으로 공화주의에 나타나는 특징으로는 국가 전체 또는 시민들 전체를 대표하여 특정이익이 아닌 국가전체의 이익을 고려하는 대의제를 통치의 기본제도로 삼았다. 여기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에서 발생하는 입장에 대해 숙고하는 심의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Ⅲ. 교과서 내용분석 설계

1. 분석대상

10학년 사회교과서 중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검정을 통과한 후 2011년부터 현행 고등학교 사회교과서로 채택된 9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사회구성원인 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과 정치의 이해를 돕는 정치영역에 해당하는 ‘Ⅷ. 정치 과정과 참여 민주주의’ 대단원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현행 2009년 사회과 교육과정은 고등학교의 경우 1학년(10학년)은 공통으로 ‘사회’ 과목을 이수하고 2, 3학년(11, 12학년)에서 심화선택 과목을 이수하고 있다. 10학년의 ‘사회’ 교과의 경우, 지리영역과 일반사회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일반사회 영역은 다시 사회문화, 법, 정치, 경제 단원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정치관련 심화선택 과목으로는 ‘법과 정치’ 1종 교과서가 있다.⁵⁾ 따라서 고 2, 3학년에서 ‘법과 정치’과목을 선택하지 않는 이상 정치에 대한 기본적 원리와 이해는 1학년의 ‘사회’ 교과 중 정치단원에서 기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현재 사회과 집필은 대강화(大綱化)를 강조하고 있어 교과서 개발자에게 교과서 주제구성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렇더라도 단원개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보면 정치관련 단원인 ‘정치 과정과 참여 민주주의’의 경우 정치공동체 구성원인 시민이 정치과정에 자발적이고 능동적

5) 2009년 개정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은 선택 과목 적정화의 모색이라는 취지아래 ‘사회·문화’ 과목은 존속시키고, ‘경제’ 교육과정은 ‘경제생활과 금융’이라는 단원을 신설하는 부분개정을 하였으며, ‘법과 사회’와 ‘정치’를 합하여 ‘법과 정치’라는 하나의 과목으로 통합하였다.

으로 참여해야 함을 인식시키고, 이를 위해 다양한 참여주체들이 정치 과정에 상호작용하며 정치발전은 참여에 기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 정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도록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41).

〈표 1〉 10학년 사회교과서 내용체계표

지리영역	일반사회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와 지리정보 ● 자연환경과 인간생활 ● 문화 경관의 다양성 ● 장소 인식과 공간 행동 ● 지역 개발과 환경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변동과 문화 ● 인권 및 사회정의와 법 ● 정치과정과 참여민주주의 ● 경제성장과 삶의 질 ● 국제거래와 세계화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09),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사회』, p. 23.

이를 위한 교수방법으로 첫째, 정치권력의 구조와 기능을 민주주의의 맥락에서 이해하고, 둘째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행위 주체와 그들 간의 상호 관계를 파악하고, 셋째 정치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참여 방법과 자세를 탐색하며, 넷째 정치 발전의 과제를 정치 문화와 관련지어 이해하며 마지막으로 정치적 쟁점의 사례를 사회·문화적, 법적,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경험을 제공하도록 제시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41-43).

〈표 2〉 분석대상 교과서 및 단원명

분류 기호	저자	출판사	단원명
A	김종욱 외 9인	교학사	1. 정치권력의 구조와 기능 2. 정치 과정과 정치 참여 3. 정치 발전과 정치 문화
B	허우금 외 9인	교학사	1. 정치권력과 정치 과정 2. 정치 발전과 정치 문화 3. 정치적 쟁점의 분석과 해결
C	서태열 외 9인	금성 출판사	1. 정치권력과 민주주의 2. 정치 과정과 정치 참여 3. 정치 발전과 정치 문화
D	최병모 외 10인	미래엔	1. 현대 민주 사회의 정치 과정 2. 정치 발전과 정치 문화 3. 정치적 쟁점의 합리적 해결
E	이동환 외 6인	법문사	1. 민주주의와 정치권력의 구조 2. 현대의 정치 과정과 참여 3. 민주 정치 발전의 과제 4. 정치적 쟁점의 합리적 해결
F	이영민 외 8인	비상 교육	1.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치권력 2. 현대 정치 과정과 참여 3. 정치발전을 위한 시민의 정치 참여 4. 정치 발전과 정치 문화 5. 정치적 쟁점의 해결
G	류재명 외 10인	천재 교육	1. 정당한 정치권력,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2. 견제와 균형, 참여로 세우는 정치권력 3. 정치적 의사, 표출에서 집행까지 4.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한다. 5. 정치 발전은 참여 의식과 제도의 힘으로 6. 바람직한 참여로 정치 발전을 7. 정치 문화는 정치 발전의 주춧돌 8. 우리는 참여형 정치 문화로 간다. 9. 정치적 쟁점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
H	박병익 외 12인	천재 교육	1. 정치권력과 민주주의 2. 정치 과정과 정치 참여 주체 3. 민주 정치의 발전과 정치 참여 4. 민주 정치의 발전과 정치 문화 5. 정치적 쟁점과 합리적 해결 과정
I	강운선 외 9인	한솔 교육	1. 정치권력과 정치 과정 2. 정치 발전과 정치 문화 3. 정치적 쟁점과 합리적 해결

2. 분석준거 및 설계

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하기에 앞서 내용 분석의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에 대한 내용의 반영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앞서 II장의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한 여러 학자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내용요소를 추출하고자 한다. 사회 과목에 대한 교육과정 해설에 따르면 첫째 정치권력의 구조와 기능, 둘째 정치 참여 주체와 상호관계, 셋째 정치참여의 방법과 자세, 넷째 정치발전과 정치문화, 마지막으로 정치적 쟁점의 합리적 해결 등의 다섯 가지 범주로 제시하여 민주주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명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틀로써 사회과 교육과정 해설의 분류를 다소 변형하여 ① 보편적인 원리로서 제시되는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통치원리, ② 정치권력의 구조와 기능으로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은 제도적 측면, ③ 제도를 실현시키는 운영원리, ④ 정치문화의 측면의 네 부분으로 나누어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내용을 정리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① 통치원리

민주주의의 통치원리인 국민주권의 원리는 ‘국민에 의한 지배, 정치권력이 국민에 귀속’됨을 의미한다. 공화주의는 협의의 의미로는 “군주국이 아닌 비군주국”의 형태를 의미하나 단일한 정치체제가 갖는 위험성을 피하기 위해 지지됐던 혼합정체론의 전통에 따라 권력분립의 원리가 중요한 통치원리로 지적된다. 또한 권력을 제도적으로 한정할 필요성으로 인해 법에 의한 지배를 강조한다.

② 제도적 특성

민주주의의 제도적 원리인 '선거'는 정치지도자를 선출하고 교체할 수 있는 핵심기제이다. 이 선거는 일반적으로 '보통·평등·직접·비밀'의 4대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투표 역시 지도자의 선출뿐만 아니라 사회 정책에 대한 국민 개개인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수단이다.

공화주의에서 핵심적 제도로 여겨지는 '대의제'는 개개인의 즉각적인 영향에서 벗어나 과도한 정치적 의사를 여과하고 유권자로부터 일정정도 독립성을 가지며 의견을 객관화시킬 수 있다.

③ 운영원리

민주주의의 운영원리는 정치적 결정과정의 참여에 있어 각 시민이 동등한 기회와 표의 가치를 갖는 '1인 1표'를 강조하는데 이는 동등한 발언권을 갖는 '정치적 평등'의 원리를 의미한다. 정치적 평등과 더불어 민주주의의 또 다른 중요한 운영원리는 '다수결의 원칙'이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어떤 특정정책에 대해 모든 국민들이 만장일치로 합의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이견을 보이는 여러 대안들 중에 다수가 희망하는 쪽으로 결정하는 것이 다수결의 원칙이다.

한편 공화주의는 민주주의 자체가 견제와 균형이 부재 시 전제지배로 변질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상정한다. 따라서 혼합정체의 전통에 따른 권력의 부패방지를 막기 위해 '견제와 균형'이 중요한 운영원리이다.

④ 정치문화

민주주의의 정치문화는 특정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동등한 발언권을 가지고 토론에 참여하고 다수의 의견으로 합의된다. 또한 민주주의는 대중의 힘이 모일 때 구현되는 가치로 '참여'를 중요한 미덕으로 여긴다.

공화주의는 공익을 위해 사익을 양보할 수 있어야 하며 공공선의 실현을 위해서는 덕성을 갖춘 시민들의 자질이 중요하다. 사회에 대한 책임 의식과 갈등에 대한 용인으로 합의를 가정하지는 않는다. 다양한 이해관계에서 형성되는 관점에 대해 숙고하는 심의를 선호한다.

앞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원리에 대한 학문적 논의를 검토하여 뽑아낸 내용요소의 주제와 핵심용어를 정리한 것은 아래 <표 3> 과 같다.

<표 3>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관련 내용요소

내용 요소	민주주의	공화주의
통치 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에 의한 지배, 정치권력이 국민에 귀속되는 국민주권의 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주국이 아닌 비군주국 형태 - 단일정치 제체가 갖는 위험성을 피하기 위한 혼합정체의 권력분립 원리 - 법에 의한 합법적 지배
	핵심용어: 민주(주의) / 국민주권	핵심용어: 공화(주의) / 권력분립 / 법치주의
제도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를 통한 지도자 선출 및 교체,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 반영시킬 수 있는 투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의 정치적 의사를 여과하고 유권자로부터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대의제
	핵심용어: 선거 / 투표	핵심용어: 대의제
운영 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등한 발언권 및 표의 등가를 갖는 정치적 평등 - 다수결의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력의 부패방지를 위한 ‘견제와 균형’
	핵심용어: 다수결 / (정치적) 평등	핵심용어: 견제(균형)
정치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 권리 중시 - 참여의 강조 - 정책결정시 토론을 통한 합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의무) - 공익(공공선)의 실현 - 교육받은 시민들의 덕성 중시 - 다양한 관점에 대한 속의 선호
	핵심용어: 권리 / 참여 / 토론 / 타협(합의)	핵심용어: 의무(책임의식) / 시민(덕)성 / 공공선 (공익) / 심의(속의)

교과서는 교육목적과 방향을 제시하는 1차 자료로서 크게 본문과 탐구활동6)으로 구성되는데, 본문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학습이 이루어진 후 탐구활동 등의 2차 학습을 통해 교육내용을 습득한다. 추출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내용요소를 바탕으로 교과서 본문과 탐구활동을 대상으로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시도하기 위한 분석준거는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교과서 내용분석 준거

분석요소	양적 준거	질적 준거
본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장 수에 따른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관련 비중 -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관련 핵심용어 출현 빈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중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는가? - 다루는 내용에 대한 기술의 태도는 어떠한가?
탐구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주제와 관련한 탐구활동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중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는가? - 주로 어떤 활동이 제시되고 있으며 활동과 주제의 연관성은 적정한가?

1) 양적 분석

본 연구의 양적 분석을 위한 분석단위는 문장과 단어이다. <표 3>에 정리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관련 내용요소를 바탕으로, 첫째로는 본문

6) 탐구활동의 범주는 교과서 본문내용을 제외한 제반 학습활동을 포함하는데, 이는 각 교과서 별로, 그리고 교과서 내에서도 도입활동, 탐구활동, 심화활동, 한 걸음 더, 탐구학습, 사례탐구 등 다양한 명칭으로 다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교과서 지문 이외 제시되어 있는 제반 학습활동을 모두 탐구활동에 포함한다.

의 문장에 내포된 중심 주제에 따라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주제를 구분하여 해당 내용의 비중을 측정하여 전체 문장에서 관련 서술이 각각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다루어지는 분석한다. 탐구활동에서는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내용의 주제 중 어떤 내용이 주로 제시되고 있는지 비중을 측정한다. 이러한 작업은 교과서에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내용 교육의 관련 정도와 편향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표 5〉 교과서의 양적 분석양식

분류 기호	해당 페이지	본문			탐구활동		
		총 문장 수	민주주의 관련주제	공화주의 관련주제	총 활동 수	민주주의 관련주제	공화주의 관련주제

두 번째로는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관련 핵심용어들의 빈도수를 각각 측정한다. 이러한 작업으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와 관련하여 어떤 특정 용어가 교과서에 출현하고 있으며 그 빈도가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 파악해보고자 한다.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와 관련한 핵심용어는 앞서 제시된 <표 3>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관련 내용요소에 핵심용어로 추출한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2) 질적 분석

본 연구는 질적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여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교육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시도한다. 본문의 텍스트에 외형적으로 나타난 내용뿐만 아니라 맥락에 숨어있는 내용을 해석하는 질적 분석을 통해

교과서에 나타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에 대한 서술에 있어 신념이나 태도 등을 발견할 수 있다.

앞서의 학문적 논의를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원리 중 통치원리, 제도적 특징, 운영원리, 정치문화 등의 네 부분으로 구분한 기준에 따라 각 내용에 대한 충실한 서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내용 서술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지 구체적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탐구활동 역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중 어떠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제시된 활동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관련 내용과의 연계가 적절한지를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IV. 주요 분석결과

1.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관련 내용의 양적 분석

1) 관련 주제별 교과서 비중

10학년 사회과 교과서의 정치영역에 해당하는 ‘VIII. 정치 과정과 참여 민주주의’ 단원의 본문과 탐구활동의 내용을 주제에 따라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내용으로 분류한 결과는 <표 6> 과 같다.

각 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교과서별로 편차는 있지만 모든 교과서에서 민주주의 관련 주제 서술이 공화주의 관련 주제 서술보다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서 본문의 전체 문장 수는 C 교과서가 244문장으로 가장 많은 수를 보이고 있었고 D 교과서가 89문장으로 가장 적은 수를 보여 문장 수만 따져서는 거의 3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여 주었다. 전제 문장 수를 100%로 기준했을 때 각 교과서의 민주주의 관련 주제는 최소 19.9%, 최대 33.8%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화주의 관련 주제는 최소 7.5%, 최대 17.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서술 비중이 크다는 것을 수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민주주의 관련 주제의 서술이 가장 큰 교과서는 A 교과서로 전체 130문장 중 44문장(33.8%)이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서술이었다. 특이한 것은 공화주의를 주제로 한 문장도 23문장(17.7%)으로 타 교과서들 중에서 공화주의 주제 서술의 비중이 제일 높았다는 점이다. 반면 민주주의 관

런 주제의 비중이 가장 낮은 교과서는 F 교과서로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서술은 28문장(19.9%)이었다.

〈표 6〉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주제에 따른 내용 비중

단위: 개 (%)

분류 기 호	해당 페이지	본문			탐구활동		
		총 문장 수	민주주의 관련주제	공화주의 관련주제	총 활동 수	민주주의 관련주제	공화주의 관련주제
A	pp. 220-249	130 (100.0)	44 (33.8)	23 (17.7)	23 (100.0)	12 (52.2)	3 (13.0)
B	pp. 254-285	162 (100.0)	51 (31.5)	12 (7.5)	10 (100.0)	3 (30.0)	1 (10.0)
C	pp. 242-275	244 (100.0)	61 (25.0)	30 (12.3)	9 (100.0)	4 (44.4)	1 (11.1)
D	pp. 208-231	89 (100.0)	18 (20.2)	12 (13.5)	7 (100.0)	3 (42.9)	1 (14.3)
E	pp. 224-253	146 (100.0)	43 (29.5)	15 (10.3)	12 (100.0)	4 (33.3)	1 (8.3)
F	pp. 246-279	141 (100.0)	28 (19.9)	13 (9.2)	8 (100.0)	4 (50.0)	1 (12.5)
G	pp. 234-263	163 (100.0)	50 (30.7)	15 (9.2)	16 (100.0)	4 (25.0)	2 (12.5)
H	pp. 220-247	117 (100.0)	33 (28.2)	12 (10.3)	14 (100.0)	5 (35.7)	0 (0.0)
I	pp. 238-263	119 (100.0)	28 (23.5)	13 (10.9)	11 (100.0)	4 (36.4)	1 (9.1)

주: 가치판단이 배제된 중립적 문장은 총 문장 수에서 제외함.

한편 공화주의 관련 주제의 서술비중이 가장 낮은 교과서는 B 교과서로 전체 162문장 중에 12문장(7.5%)에 불과하였다.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관련 주제를 제외한 서술 내용은 주로 정치권력의 구조와 기능, 정치 과정 및 그 행위 주체들의 관계 등에 대한 정치 일반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루었으며 교과서 별로 선정된 정치적 쟁점에 대한 사례가 나머지 내용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를 제외하고 대체로 민주주의 관련 주제에 비해 공화주의 관련 주제의 서술 비중이 높을 것이라 예상은 했지만 교과서별로 그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민주주의 주제가 공화주의 주제에 비해 차지하는 비율은 낮게는 2배에서 많게는 4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탐구활동의 경우 역시 모든 교과서에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관련 주제의 차이는 확연히 드러났다. 각 교과서의 탐구활동을 분석해 본 결과 공통적으로 드러난 특징은 민주주의 관련 주제가 공화주의 관련 주제보다 훨씬 많이 제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특징은 민주주의에 대한 내용 중에서도 참여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공화주의 관련 주제는 견제와 균형 원리를 제외하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각 교과서 별로 탐구활동의 수는 대체로 10여개 내외가 제시되어 있는데, A 교과서는 23개로 탐구활동의 수가 가장 많았다. 또한 민주주의 관련 주제의 탐구활동도 12개(52.2%)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또한 비율상은 아니지만 다른 교과서의 공화주의 관련 주제의 활동이 1, 2개인 반면 A 교과서의 공화주의 관련 주제의 탐구활동은 3개로 산술적 개수만 놓고 봤을 때 타 교과서보다 많은 수가 제시되어 있었다.

구체적인 탐구활동의 내용을 살펴보면 민주주의 관련 주제의 경우 A 교과서는 참여형태를 다룬 것이 6개, 다수결 관련하여 1개, 참여의 종류로서 주민소환제 1개, 투표와 선거참여에 대한 내용 1, 토론을 통한 쟁점 2 그리고 저항권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하여 전체 탐구활동의 절반이

넘는 활동이 민주주의와 관련된 주제였다. 한편 공화주의 관련 탐구 활동은 삼권분립, 권력분립, 통치기구 간 견제와 균형에 대한 사례로서 탄핵소추와 관련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다른 교과서들의 탐구활동에서 나타나는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주제로 한 활동들은 전반적으로 민주주의 관련 주제는 3~5개, 공화주의 관련 주제는 0~1개로 나타났다. B 교과서의 탐구활동은 민주주의 관련 주제가 투표율 하락에 관한 내용, 정치참여의 방법에 대한 내용 2개를 다루는 한편 공화주의 관련 내용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다루고 있다. C 교과서는 민주주의 관련 내용으로 민주주의 원리, 참여, 투표율 최저문제, 토론 문화 등을 다룬 활동이 4개였고 공화주의 관련 주제로는 우리나라 삼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을 다룬 활동이 1개였다. D 교과서 민주주의 관련은 국민투표 제도, 참정권, 쟁점에 따른 참여로 3개, 공화주의 주제는 통치기구의 견제수단에 대한 활동이 있었다. E 교과서의 민주주의 관련 활동은 민주주의와 정치권력, 여성의 선거권 보장을 사례로 한 참정권, 직접 참여의 확대, 전자민주주의를 통한 참여형 정치문화 등의 4개, 공화주의 관련 활동은 정치구조의 권력 분립에 관한 내용 1개였다. F 교과서의 경우는 민주주의 관련 탐구활동은 참여주체, 시민의 정치참여, 쟁점에 대한 참여 등 민주주의에서 참여에 대한 활동이 4개, 공화주의 주제로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 1개를 다루고 있다. G 교과서의 민주주의 관련 탐구활동은 민주주의의 참여와 관련한 주제가 정치 참여 방법, 청소년의 입장에서 참여, 참여의 현주소, 참여 방법인 국민소환제로 4개였고 공화주의 관련 주제는 권력분립과 정치권력을 견제하는 시민의 역할 2개로 나타났다. H 교과서의 경우, 민주주의 관련 탐구활동은 정치참여의 의미와 참여 관련 쟁점 2, 참여의 방안으로써 강제 투표제, 참여형 정치문화 등 5개인 반면 공화주의 관련 활동은 하나도 없었다. 다

른 교과서들이 의례히 공화주의 원리인 견제와 균형을 포함시켰던 것이 비해 다른 교과서에는 다루지 않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는 활동을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I 교과서는 민주주의 관련 탐구 활동으로 참여 주체, 민주주의 원리와 참여, 국민의 정치참여의 필요성, 정치참여 방법 등 참여를 주제로 한 활동이 4개, 공화주의 관련 탐구활동으로 통치기구의 상호 견제 1개가 제시되어 있었다.

교과서의 본문과 탐구활동의 양적 분석을 통해 민주주의 교육의 편향성이 드러난 것에 더하여 민주주의 교육에 있어서도 참여에만 지나친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2) 관련 핵심용어의 빈도분석

주제를 기준으로 한 문장 분석에는 연구자의 주관성이 개입할 여지가 강하여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한 양적 분석 역시 시도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7> 과 같다. 핵심용어의 빈도분석은 해석상 어려움이 있지만 교과서에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와 관련한 핵심용어가 얼마나 빈번하게 사용되었는지 산술적인 계산을 통해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원리 중 어떠한 특정 원리가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지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관련한 핵심단어의 빈도수를 분석한 결과 역시 민주주의와 관련한 핵심용어가 공화주의와 관련한 용어보다 빈번하게 출현함을 알 수 있었고 '참여 민주주의' 교육에 입각한 편중된 단어 선별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우선 교과서 9종에서 민주주의의 관련한 핵심단어 중 가장 많이 나타난 용어는 공통적으로 '참여', '민주(주의)', '선거', '권리(주인의식)'의

순으로 나타났다. 민주주의 원리의 한 요소인 ‘참여’가 9종을 전체로 봤을 때 403회나 언급되었고 민주(주의)는 298회, 선거는 83회, 권리(주인의식)는 32회 언급되었다. 특히 ‘참여’와 ‘민주(주의)’의 두 용어가 수백회 언급된 것은 사회 과목의 정치관련 단원 자체가 “정치 과정과 참여 민주주의”로 제시되어 있는 이유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투표(8회)’, ‘평등(8회)’는 각각 8회로 가장 낮은 빈도를 기록했는데 전체적으로 교과서마다 대체로 1-3회 정도 언급되었지만 B 교과서와 H 교과서의 경우는 두 용어 모두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토론(13회)’, ‘다수(16회)’, ‘국민주권(17회)’, ‘합의(26회)’ 순으로 낮은 빈도수를 나타냈다. 민주주의의 원리의 핵심용어인 다수결의 원리에 대해 D 교과서와 H 교과서에서는 언급되지 않았고 국민주권의 경우 D 교과서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공화주의와 관련한 핵심용어를 살펴보면 교과서 9종을 전체로 했을 때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인 단어는 ‘견제(균형)’으로 73회 언급되었고, ‘공공선(공익)’이 44회, 대의제(26회), 권력(삼권)분립(17회) 순이었다. 공화주의 원리 중 무엇보다 견제와 균형이 교과서에서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공화(주의)’와 ‘심의(숙의)’의 용어는 9종 교과서 어디서도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 민주(주의)가 298회나 언급된 것과 비교할 때 ‘공화(주의)’라는 단어가 한 번도 출현하지 않았다는 것은 공화주의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다. 또한 ‘참여 민주주의’의 대단원명이 제시되어 있듯이 ‘심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역시 전혀 소개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법치(주의)’와 ‘시민(덕)성’이라는 용어도 낮은 빈도를 나타냈는데 ‘법치’의 경우 C 교과서에서만 2회 정도 언급되었고 ‘시민(덕)성’ 역시 D 교과서에서만 2회 정도 언급되었을 뿐이다.

〈표 7〉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관련 핵심단어의 빈도

교과서 핵심단어		A	B	C	D	E	F	G	H	I	계
		민 주 주 의	민주(주의)	34	41	29	22	55	29	22	34
국민주권	2		2	3	0	2	1	1	3	3	17
선거	10		8	14	4	13	11	12	7	4	83
투표	2		0	2	1	2	0	0	0	1	8
다수(결)	2		4	2	0	1	0	5	0	2	16
평등	2		0	3	0	1	1	1	0	0	8
권리(주인의식)	2		2	4	5	4	3	2	5	5	32
참여	49		43	55	30	58	40	49	28	51	403
토론	3		0	7	2	0	0	1	0	0	13
타협(합의)	3		13	1	1	4	2	0	2	0	26
공 화 주 의	공화(주의)	0	0	0	0	0	0	0	0	0	0
	권력(삼권)분립	3	0	4	0	4	1	3	0	2	17
	법치(주의)	0	0	2	0	0	0	0	0	0	2
	대의제	7	0	5	1	5	5	0	2	1	26
	견제(균형)	7	6	17	8	6	5	9	2	13	73
	의무(책임의식)	1	0	2	1	2	0	0	0	0	6
	시민(덕)성	0	0	0	2	0	0	0	0	0	2
	공공선(공익)	12	3	6	6	3	1	6	2	5	44
	심의(숙의)	0	0	0	0	0	0	0	0	0	0

2.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관련 교육내용의 질적 분석

통치원리, 제도적 특징, 운영원리, 정치문화 등의 네 부분으로 설정한 질적 분석을 통해 교과서에 나타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원리에 대한 자세한 교육내용과 기술의 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1) 통치원리

통치원리로 민주주의는 국민주권, 공화주의는 권력분립과, 법치주의를 들 수 있다.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통치원리에 대해 교과서의 본문 서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8〉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통치원리 관련 서술 예

교과서	민주주의	공화주의
A		<p>정치권력이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정의 실현을 추구하는 가운데 법에 근거하여 행사되어야 한다.</p> <p>- A 교과서, p. 222.</p> <p>대부분의 민주 국가에서는 법을 제정하는 입법부,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 법을 적용하는 사법부로 권력을 분산시켜 통치 기구를 구성하는 삼권 분립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p> <p>- A 교과서, p. 227.</p>

B		<p>정치권력의 행사는 법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p> <p>- B 교과서, p. 259.</p>
C	<p>과거 절대주의 시대에는 왕의 권력이 신으로부터 부여받았다는 왕권신수설에서 그 정당성을 찾았지만 오늘날에는 국가의 최고 권력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국민주권설을 근거로 정치권력의 정당성 문제가 다루어진다.</p> <p>- C 교과서, p. 246.</p>	<p>현대 민주 국가에서 정치권력이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 정치권력의 행사가 법치주의에 기초한 것이어야 한다. 이는 모든 국가 권력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만든 법률에 따라 행사되어야 함을 의미한다.</p> <p>- C 교과서, 246.</p>
D	<p>민주 정치는 시민 스스로 다스림과 동시에 다스림을 받는다는 원리를 바탕으로 하므로...</p> <p>- D 교과서, p. 223.</p>	
E	<p>오늘날에는 한 사람이나 소수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다수의 국민에 의하여 통치가 이루어지는 민주 정치를 많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p> <p>- E 교과서, p. 226.</p>	<p>정치권력이 한곳에 집중될 경우 독재자가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권력의 집중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치권력을 적절하게 나누는 권력 분립제를 시행한다.</p> <p>-E 교과서, p. 228.</p>
F	<p>근대 이후에는 사회 계약설에 근거하여 '정치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국민주권설이 보편화되었다.</p> <p>- F 교과서, p. 251.</p> <p>민주 정치는 시민 스스로 다스림과 동시에 다스림을 받는다는 원리에 근거한다.</p> <p>- F 교과서, p. 263.</p>	

G		<p>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치권력을 여러 주체에게 분산시켜 놓았는데, 이를 권력 분립이라고 한다. 권력 분립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실현된다.</p> <p>- G 교과서, p. 238.</p>
H	<p>민주주의는 ‘시민에 의한 지배’를 의미한다. 그리고 민주정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치 형태 즉, 일반 시민이 주권을 지니고 지배하는 정치 형태를 의미한다.</p> <p>- H 교과서, p. 232.</p>	
I	<p>근대 이후 다수 국민에 의한 지배와 국민 주권의 원리에 기초한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정치권력의 획득과 행사는 국민의 동의와 지지에 의해서 가능하게 되었다.</p> <p>- I 교과서 p. 241.</p>	<p>민주 국가에서는 권력 분립에 기초하여 정치권력을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으로 분리하고 이를 서로 독립된 기관에 맡겨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 속에서 구조적으로 작동되도록 하고 있다.</p> <p>- I 교과서 242.</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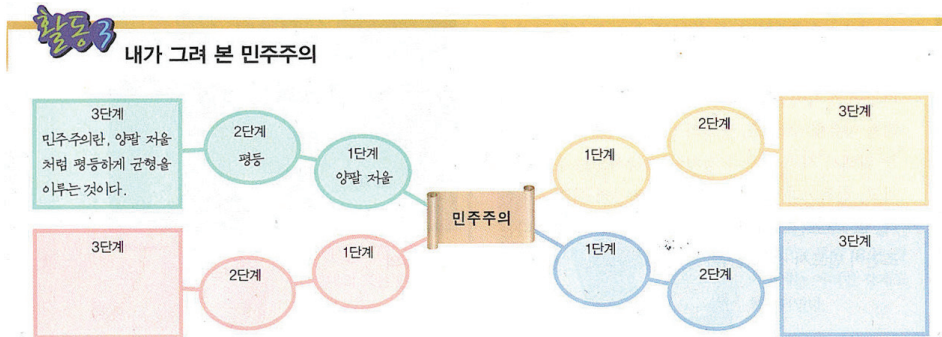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통치원리에 대한 교과서 기술을 살펴보면 민주주의의 경우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국민주권 원리가 대부분 충실하게 기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A** 교과서의 경우 절대주의 시대의 왕권신수설과 오늘날의 국민주권설을 비교하는 서술을 함으로 국민주권의 역사성에서 차이가 있음을 기술을 피하고 있으며, **F** 교과서의 경우 사회계약설에 근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술함으로써 국민주권이 근대 계몽주의 사상에서 유래되었음을 적시하고 있다.

한편 공화주의에 대해서는 공화주의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나 설명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공화주의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의 경우, 법치주의에 대한 기술은 A 교과서와 B 교과서의 일부에서만 정치권력의 정당성 획득 차원에서 나타날 뿐이고 다른 교과서에서는 법치주의에 대한 기술이 없었다.

탐구활동에서는 민주주의의 통치원리에 대한 주제로 C 교과서에서 “내가 그려본 민주주의 원리”라는 주제로 민주주의의 원리에 대해 생각나는 대로 브레인스토밍 활동이 제시되었다.

〈그림 1〉 민주주의 원리 관련 탐구활동 예



1. 그림의 1단계에 민주주의 하면 떠오르는 상징물을 쓰고, 2단계에는 상징물을 선택한 이유를 단어로 써 보자.
2. 1단계의 상징물과 2단계의 단어를 연결하여 자신이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3단계에 서술해 보자.

* 출처: C 교과서 탐구활동, p. 248.

그리고 모든 교과서에서 공화주의 관련 내용으로 입법, 행정, 사법의 권력분립 원리에 대한 이해의 활동내용이 제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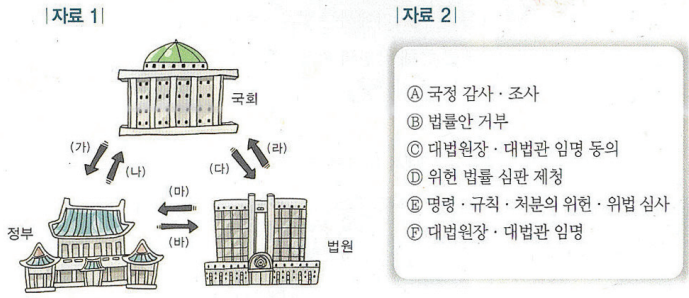
민주주의의 국민주권 원리는 대체로 본문에서 충실하게 기술된 반면 탐구활동에서는 국민주권 원리에 대한 활동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공화주의 원리로는 대부분 권력분립에 대한 탐구활동은 제시되었지만

법치주의 원리에 대한 활동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그림 2> 공화주의 원리인 견제와 균형 관련 탐구활동 예

탐구 활동 견제와 균형의 원리란 무엇인가?

다음 자료를 보고 우리나라 정치권력의 견제와 균형에 대해 알아보자.



- ㉠ 국정 감사·조사
- ㉡ 법률안 거부
- ㉢ 대법원장·대법관 임명 동의
- ㉣ 위헌 법률 심판 제청
- ㉤ 명령·규칙·처분의 위헌·위법 심사
- ㉥ 대법원장·대법관 임명

1. |자료 1|의 그림에서 (가)~(바)에 들어갈 내용을 |자료 2|에 제시된 ㉠~㉥에서 찾아 연결해 보자.
2. |자료 2|에 제시된 정치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 중에서 올해 시행된 사례가 있는지 신문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조사해 보자.

* 출처: B 교과서 탐구활동, p. 260.

2) 제도적 특성

<표 9>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제도적 특성 관련 서술 예

교과서	민주주의	공화주의
A	정치권력은 민주적 절차에 따른 합법적 선거를 통하여 창출되고, 국민의 자발적인 지지와 동의를 얻을 때 정당성을 갖는다. - A 교과서, p. 222.	현대 국가의 대의 정치의 대표성의 문제와 정치적 무관심이라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그 한계를 노출시켰다. - A 교과서, p. 236.
B	현대 민주 국가에서 국민은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	

	<p>대표자들은 정부를 구성하고 운영하면서 정치권력을 행사한다.</p> <p>- B 교과서, p. 257.</p> <p>현대 민주 정치에서 정치권력을 가장 정당하게 획득하는 방법은 선거이다.</p> <p>- B 교과서, p. 259.</p>	
C	<p>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선거라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정치권력을 획득해야 한다.</p> <p>- C 교과서, p. 246.</p> <p>시민들이 보다 직접적으로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선거와 여론을 통한 참여이다.</p> <p>- C 교과서, p. 257.</p> <p>선거는 투표를 통해 시민을 대표하는 공직자를 선출하는 공식적인 과정으로, 시민이 정치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단이 된다.</p> <p>- C 교과서, p. 257.</p>	<p>오늘날의 대의 정치에서는 시민의 의사가 정치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p> <p>- C 교과서, p. 263.</p>
D	<p>시민은 국가의 주인으로서 선거에 직접 출마하거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p> <p>- D 교과서, p. 220.</p>	
E	<p>(...) 정치권력의 획득은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p> <p>- E 교과서 230</p>	

	<p>정당한 정치권력의 확보를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바르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져야 한다.</p> <p>- E 교과서, p. 231.</p>	
F	<p>민주 국가에서는 공정한 선거를 통해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은 개인이나 집단이 정치권력을 획득하게 된다.</p> <p>- F 교과서, p. 254.</p> <p>시민이 개별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에는 우선 선거가 있다.</p> <p>- F 교과서, p. 265.</p>	<p>대의 민주 정치 아래에서 시민은 몇 년에 한 번씩 대표자를 선출하는 일에 참여한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시민의 다양한 의사가 정치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p> <p>- F 교과서, p. 263.</p>
G	<p>선거는 주기적으로 대표자를 선출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시민이 자신의 입장을 수시로, 그리고 정확하게 표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p> <p>- G 교과서, p. 244.</p> <p>선거는 시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공식적인 방법이다. 선거를 통해 시민은 특정 대표자 또는 정책을 지지하거나 반대함으로써 주권을 행사한다.</p> <p>- G 교과서, p. 252.</p>	
H		<p>오늘날의 민주 정치는 대의제 방식을 취하고 있고, 대의제 민주 정치에서 가장 기본적인 정치 참여의 형태는 선거이다. 하지만 시민들이 선거에만 참여하고 이후의</p>

		<p>정치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소수의 대표자들이 시민들의 뜻에 반하는 정책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p> <p>- H 교과서, p. 234.</p>
I	<p>시민의 정치 참여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은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다. (중략) 선거는 민주 정치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며,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린다.</p> <p>- I 교과서, p. 250.</p>	

민주주의의 제도적 특징으로 ‘선거’와 ‘투표’를 들 수 있다. 특히 선거를 통한 주기적인 정권교체가 민주주의 운영원리의 핵심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투표는 특정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된다. 교과서에서는 이러한 민주주의의 핵심제도인 선거와 투표 중에서 선거를 매우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선거에 대한 기술은 교과서에 따라 정치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수단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시민의 정치참여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수단의 두 가지 차원, 또한 민주정치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요소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기술되고 있다.

한편 공화주의의 핵심적 제도로 여겨지는 대의제는 민주주의에서 주장하는 선거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선거를 통해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의제에 대한 교과서 서술은 전반적으로 부정적 시각에서 기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의제가 지닌 문제점으로 대표성의 문제와 정치적 무관심으로 인한 한계, 이로 인해 시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선거의 중요성과 참여를 강조하면서 선거 결과 운영되는 대의제에 대해서는 한계만이 지적될 뿐 대의제의 운영원리나 순기능에 대한 충분한 기술이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아쉽다.

탐구활동에서는 **B**교과서와 **C**교과서에서 민주주의에서의 투표율 하락에 관한 내용에 대해 제시되었고, **D**교과서에서는 국민투표제도, **E** 교과서에서는 여성의 선거권 보장을 사례로 한 참정권 확대에 대해 논의하는 활동, **H**교과서에서는 강제투표제에 도입에 대한 토의활동이 제시되었다. 한편 공화주의의 제도인 대의제에 대한 이해를 돕는 탐구활동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3) 운영원리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운영원리에 대한 서술의 경우,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과 정치적 참여에 있어서 평등을 들 수 있다. 다수결의 원리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교과서에서 기술이 미흡했다. 다만 **B** 교과서와 **G** 교과서만이 정치적 쟁점 해결에 있어서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음을 제시했을 뿐이다. 민주주의에 있어서 다수결의 원칙은 특정 사안에 대해 의견 충돌이 있을 때 보다 더 큰 수를 가진 측의 의견에 따르는 원칙을 말한다. 다수에 의한 지배의 경우 민주주의의 핵심 운영원리이지만 다수에 의한 민주적 지배에 의해 민주주의를 말살할 수 있다는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독일 나치의 집권이 그 예이다. 다수결의 원리에 대한 좀 더 풍부한 서술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한편 정치적 평등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교과서가 기술하고 있지 않았다. 다만 교과서 **G**에서 정치적 쟁점에 관계되는 주체들에게 동등한 참

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기술한 것이 나름 정치적 평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공화주의에서 강조하는 견제와 균형의 경우, 특정 정치세력에 권력이 집중되면서 발생하는 부패를 막고자 하는 중요한 원리로 교과서에서는 정치기구의 권력분립으로 인한 운영원리와 다양한 정치참여 주체들 간에 견제와 감시에 대해 비교적 충실히 기술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0〉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운영원리 관련 서술 예

교과서	민주주의	공화주의
B	<p>대화와 타협으로 합의를 추구하고,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p> <p>B 교과서, p. 275.</p>	<p>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치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누어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다.</p> <p>- B 교과서 p. 258.</p>
G	<p>의견이 충분히 개진되고 논의된 후에는 다수결의 원리를 도입하여 정치적 쟁점을 해결하는 방식도 가능하다.</p> <p>- G 교과서, p. 260.</p> <p>정치적 쟁점에 관계된 당사자들의 동등한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p> <p>- G 교과서, p. 260.</p>	

탐구활동을 살펴보면 A교과서에서 학급의 소풍장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다수결의 원리를 적용하는 사례가 제시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정치적 평등에 대한 탐구활동 내용은 없었다. 공화주의 원리인 견제와 균형은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권력분립의 일환으로 제시된 내용에 포함되었다.

<그림 3> 민주주의의 다수결의 원리에 관한 탐구활동의 예

도입 활동 탐구 심화 학급의 소풍 장소 결정은 다수결로!

민주적인 교육 활동과 학생의 자치권 보장을 강조하는 ○○고등학교는 소풍 장소를 각 학급별로 결정하기로 하였다. 그중 1학년 3반은 소풍 장소를 결정하기 위해 학급 회의를 가장 먼저 열었다. 학급 회장의 사회로 각자 희망하는 소풍 장소에 대해 자유롭게 발표해 보기로 하자,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그중에서도 “소풍도 교육 활동이니만큼 무료입장이 가능한 박물관 견학이 좋다고 생각한다.”라는 의견과 “무엇보다 소풍은 즐거워야 하니 입장료가 다소 비싸더라도 놀이 공원이 좋다고 생각한다.”라는 의견이 대립하였다.

일정한 시간이 되자, 사회자는 토론을 중단시켜 다수결로 소풍 장소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투표 방식은 투표 용지를 사용하지 않고, 손을 들어 한꺼번에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투표 결과 박물관 16표, 놀이 공원 17표로 집계되어, 결국 놀이 공원이 소풍 장소로 결정되었다.

- 1 읽글을 읽고, 학급 회의가 민주적으로 진행되었는지 평가해 보자.
- 2 읽글을 바탕으로 다수결의 원리를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말해 보자.

* 출처: A 교과서 탐구활동, p. 242.

4) 정치문화

정치문화에 있어서 민주주의와 관련한 내용에서는 참여에 대한 강조이다. 공통적으로 교과서들은 참여의 중요성을 상당 부분을 할애하여 기술하고 있다. 참여에 대한 기술도 국민의 권리 행사의 핵심이며 참여로 인해 민주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는 당위적 입장에서 참여는 개별적이고 집단적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방법론, 특정 정치적 쟁점을 둘러싼 참여의 사례, 참여형 정치문화의 확산 등 다양한 측면에서 참여에 대한 기술이 이루어졌다. 참여 이외에도 토론의 장점과 토론의 원칙, 사회

구성원의 합의 문화 등이 민주주의의 정치문화로 제시되었다.

한편 공화주의적 입장에서 정치문화는 전체 사회구성원이 향유할 수 있는 공익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공익을 실현하는 주체로서 시민단체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공화주의에서 나타나는 다른 정치문화로서 책임의식이나 올바른 시민성, 대의제의 기제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에서 형성되는 관점을 숙고하는 심의의 필요성 등은 전혀 기술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참여에 대한 과한 강조로 다른 정치문화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1〉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정치문화 관련 서술 예

교과서	민주주의	공화주의
A		<p>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국민은 의무적으로 국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대로는 공익을 위해 재산권의 행사를 제한받기도 한다.</p> <p>- A 교과서, p. 222.</p> <p>시민단체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로, 정치권력이나 기업의 부당한 행위를 감시하고 비판을 가하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p> <p>- A교과서, p. 234.</p>
B	<p>합의적 정치 문화는 사회 구성원의 다수가 비슷한 정치적 견해를 가지는 문화이다.</p> <p>- B 교과서, p. 272.</p>	

<p style="text-align: center;">C</p>	<p>참여는 시민의 주권의식을 신장시킬 수 있다. -C 교과서, p. 263.</p> <p>참여 방법들은 주로 시민들의 직접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으로서 민주주의의 원리인 국민 주권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 C 교과서, p. 264.</p> <p>토론은 여러 사람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정치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C 교과서, p. 264.</p> <p>반드시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합의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 C 교과서, p. 265.</p> <p>대화와 토론에도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첫째, 기회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주어져야 한다. - C 교과서, p. 271.</p>	<p>더불어 사는 사회임을 영두에 두고, 모두가 이익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 C 교과서, p. 271.</p>
<p style="text-align: center;">D</p>	<p>참여 과정에 (...)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쟁점에 대한 합의에 이르러야 하며... - D 교과서, P. 223.</p>	<p>정치적 쟁점을 해결할 때에는 (...) 국민 전체의 이익과 부합되는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공익성의 원칙을 충족해야 한다. 이해 당사자들만의 사적인 이익만 반영하고 국민 전체의 이익, 즉 공익을 경시하게 되면 그 해결 방안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된다. - D 교과서, P. 226.</p>

E	<p>대립하고 있는 참여주체들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p> <p>- E 교과서, p. 236.</p> <p>다양한 영역에서 시민들의 직접 참여를 강조하는 참여 민주주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p> <p>- E 교과서, p. 245.</p>	
F	<p>시민의 정치 참여는 시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 행사로, 민주 정치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p> <p>- F 교과서, p. 267.</p> <p>참여형 정치문화는 민주주의가 발달한 사회에서 나타난다.</p> <p>- F 교과서, p. 270.</p> <p>민주 정치가 시민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는 정치라고 할 때, 민주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참여형 정치 문화의 정착이 필수적이다.</p> <p>- F 교과서, p. 270.</p>	<p>시민들은 정치 참여 과정에서 공익을 고려하면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개인이나 소속 집단만의 이익을 지나치게 앞세우는 이기주의적 태도는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가져와 민주 정치의 발전을 가로막는다.</p> <p>- F 교과서, p. 267.</p>
G	<p>민주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참여형 정치 문화가 확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p> <p>- G 교과서, p. 256.</p>	<p>시민단체는 이익 집단과 달리, 사회의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활동하는 단체이다.</p> <p>- G 교과서, p. 245.</p>

H	<p>시민들은 주권자로서 민주 정치 과정에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p> <p>- H 교과서, p. 232.</p> <p>바람직한 민주 정치 문화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이 활발하게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p> <p>- H 교과서, p. 238.</p>	
I	<p>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정치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p> <p>- I 교과서, p. 249.</p> <p>참여형 정치문화는 오늘 날 선진 민주 사회에서 나타나는 유형으로, 시민이 정치에 대한 자각과 관심을 지니고 정치 공동체와 공공의 정치과정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한다.</p> <p>- I 교과서, p. 252.</p>	<p>시민단체는 공익 실현을 위해 정치 과정에 참여하고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한다.</p> <p>- I 교과서, p. 246.</p>

탐구활동의 경우 대다수가 정치문화와 관련된 것이었는데, 각 교과서에서 정치참여의 종류와 방법, 시민의 정치참여의 필요성, 참여형 정치문화, 토론문화 등 주로 민주주의 정치문화에 해당하는 활동들이 풍부하게 제시되었다. 그러나 공화주의의 정치문화에 해당하는 공익 추구하고 관련한 활동이나 기타 심의에 관련한 활동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V. 결론 및 제언

1. 연구결과 요약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10학년 사회 교과서의 ‘VIII. 정치 과정과 참여 민주주의’ 단원에 나타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원리의 교육내용을 분석한 결과 다음의 몇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교과서 내용에 대한 양적 분석결과 첫째, 문장의 주제를 기준으로 각 교과서의 본문 상에서의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각 주제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민주주의 관련 비중이 공화주의 관련 주제의 비중보다 현저히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탐구활동 역시 민주주의 원리에 관련한 주제는 높은 비중으로 다뤄지고 있는 반면 공화주의 원리는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음을 수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각 교과서의 민주주의 관련 주제의 경우 본문에서는 내용이 대체적으로 충실하게 기술되어 있었다. 반면 공화주의 관련 주제의 경우, 공화주의 자체에 대한 소개나 이해는 전혀 찾아 볼 수 없었다. 더욱이 공화주의에 더 친밀하다고 할 수 있는 법치주의나 권력분립의 원리 등도 민주주의의 원리 중 하나로 다뤄지면서 공화주의에 대한 관심이나 이해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그나마 권력분립의 원리는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지만 법치주의 원리에 대한 내용은 매우 빈약했다. 이것은 탐구활동에서도 그대로 이어져 공화주의 관련 주제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권력분립에 대한 내용 이외에는 별다른 활동이 제시되지 않았다.

셋째,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와 관련된 핵심용어 역시 민주주의와 관련된 용어가 공화주의와 관련된 용어보다 훨씬 높은 빈도를 보였다. 민주주의의 관련한 핵심단어 중 가장 많이 나타난 용어는 공통적으로 ‘참여’, ‘민주(주의)’, ‘선거’, ‘권리(주인의식)’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투표’, ‘평등’은 가장 낮은 빈도수를 보였다.

공화주의와 관련한 핵심용어의 경우는 ‘견제(균형)’과 ‘공공선(공익)’, ‘대의제’, ‘권력(삼권)분립’ 순이었는데 무엇보다 견제와 균형이 무엇보다 빈번하게 출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공화(주의)’라는 단어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으며 ‘심의(숙의)’의 용어역시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아 ‘참여 민주주의’ 교육에 입각한 편중된 단어 선별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특히 ‘참여’와 ‘민주’라는 단어는 수백 회를 상회하는 높은 빈도수를 나타낸 반면 공화주의와 관련해서는 ‘공화’라는 단어는 교과서에 전혀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화주의의 원리로서 ‘견제와 균형’ 정도가 그나마 높은 빈도수를 나타냈을 뿐이다.

다음으로 통치원리, 제도적 특징, 운영원리, 정치문화 등의 네 부분으로 설정한 교과서 내용의 질적 분석을 통해서도 다음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

첫째, 통치원리의 경우 민주주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국민주권 원리가 대부분 충실하게 기술되어 있는 반면 공화주의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의 경우, 권력분립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세히 기술되어 있으나 법치주의에 대한 내용은 매우 빈약했다.

둘째, 제도적 특징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의 핵심제도인 선거가 매우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는 기술 내용에 있어서도 정치권력의 정당성을 확보, 시민의 정치참여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수단, 또한 민주정치의 발전의 핵심요소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기술되고 있었다. 한편, 공화주의의 핵

심적 제도로 여겨지는 대의제는 민주주의에서 주장하는 선거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전반적으로 부정적 시각에서 기술되어 있었다.

셋째, 운영원리에 대한 서술의 경우, 민주주의의 다수결의 원칙과 정치적 참여에 있어서 평등에 대한 내용 기술이 미흡했다. 그러나 공화주의에서 강조하는 견제와 균형의 경우, 특정 정치세력에 권력이 집중되면서 발생하는 부패를 막고자 하는 중요한 원리로 교과서에서는 정치기구의 권력분립으로 인한 운영원리와 다양한 정치참여 주체들 간에 견제와 감시에 대해 비교적 충실히 기술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정치문화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교과서들은 참여의 중요성을 상당 부분을 할애하여 기술하고 있다. 참여에 대한 기술도 국민의 권리 행사의 핵심이며 참여로 인해 민주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는 당위적 입장에서 참여는 개별적이고 집단적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방법론, 특정 정치적 쟁점을 둘러싼 참여의 사례, 참여형 정치문화의 확산 등 다양한 측면에서 참여에 대한 기술이 이루어졌다. 한편 공화주의적 입장에서 정치문화는 전체 사회구성원이 향유할 수 있는 공익을 강조하고 있으나 다른 정치문화로서 책임의식이나 올바른 시민성, 대의제의 기제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에서 형성되는 관점을 숙고하는 심의의 필요성 등은 전혀 기술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참여에 대한 과한 강조로 다른 정치문화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제언

본 연구는 고등학교 1학년에서 개괄적으로 배우는 사회과 교과서의 정치단원을 분석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민주공화국'이

라는 내용이 교육내용에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민주주의 교육의 편중 현상이 매우 심하다는 것을 수량과 구체적인 집필 내용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이는 현재 사회과 정치교육은 헌법에 천명되어 있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이라는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원리가 결합되어 있는 우리나라 정치체제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앞서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회과 교과서 정치단원의 바람직한 집필방향에 대해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공화주의 원리 자체에 대한 복원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사상으로 ‘공화주의’가 다시금 주목받는 상황에서 사회교과서의 정치단원의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에 대한 교육내용은 그러한 조류를 잘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물론 우리 사회에서 공화주의 전통이 미약하고 여전히 공화주의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공화주의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가 전무함은 물론이고 법치주의, 권력분립의 원리 등 공화주의의 핵심원리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도 민주주의 원리의 일부로 뭉뚱그려 교육되고 있다. 이러한 교과서의 교육내용은 학생들에게 공화주의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원천적으로 차단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둘째, 민주주의에 편중된 교과서 내용을 공화주의 교육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물론 민주주의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이기는 하지만 민주주의 역시 완벽한 정치이념은 아니다. 공화주의 가치는 민주주의의 과도함을 제어하는 기제로서 그리고 민주주의의 보완과 발전을 위해 함께 교육될 필요가 있다. 특히 교과서에서 부정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공화주의의 대의제의 원리는 즉각적이고 과도한 개별 유권자들의 요구를 조율하고 여과시키는 순기능도 갖고

있다. 또한 공화주의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선’의 실현, ‘시민의 덕성’ 중시 등은 단순히 참여를 강조하는 민주주의 교육을 넘어 자신들의 행위가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게 함으로써 올바른 시민의 자세와 역량을 함양시키는 데 중요한 교육적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셋째, 민주주의 교육에 있어서도 다양한 내용과 학습활동이 제시되어야 한다. 현재 사회과 교과서의 정치단원 내용이 민주주의 교육에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하였지만 민주주의 교육에 있어서도 참여에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핵심원리인 국민주권의 원리, 다수결의 원리, 참여에 있어서 정치적 평등 역시 민주주의 운영에 중요한 원리들이다. 이들 민주주의의 다양한 원리들에 대해서도 풍부한 기술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해 심화시킬 수 있는 탐구활동들이 제시되어야 보다 바람직한 민주주의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원리의 교육의 편향성 입증을 시도하고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원리가 교과서에서 충실하게 구현될 수 있는 바람직한 내용을 구성하는데 단초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는 서로 대치하는 원리가 아니라 보완할 수 있는 원리이며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원리가 조화롭게 교육될 필요가 있다. 사회과 교육 분야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교과서

- 김종욱 외 9인(2013), 『고등학교 사회』, 교학사.
허우궁 외 9인(2013), 『고등학교 사회』, 교학사.
서태열 외 9인(2013), 『고등학교 사회』, 금성출판사.
최병모 외 10인(2013), 『고등학교 사회』, 미래엔.
이동환 외 6인(2013), 『고등학교 사회』, 법문사.
이영민 외 8인(2013), 『고등학교 사회』, 비상교육.
류재명 외 10인(2013), 『고등학교 사회』, 천재교육.
박병익 외 12인(2013), 『고등학교 사회』, 천재교육.
강운선 외 9인(2013), 『고등학교 사회』, 한솔교육.

단행본

- 김경희, 『공화주의』, 책세상.
로버트 달 지음, 김왕식 옮김(2009), 『민주주의』, 동명사.
모리치오 비톨리 저, 김경희 옮김(2006), 『공화주의』, 인간사랑.
버나드 마넵 지음, 곽준혁 옮김(2004), 『선거는 민주적인가』, 후마니타스.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공저(2010), 『정치학의 이해』, 박영사.
윌리엄 포레스트 지음, 김봉철 옮김(2009), 『그리스 민주정의 탄생과 발전』, 한울아카데미.

이극찬(2004), 『정치학』, 법문사.

이범준·신승권(1995), 『정치학』, 박영사.

조지프 슈페터 지음, 변상진 옮김(2011),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한길사.

존 듀이, 이홍우 역(2007), 『민주주의와 교육』, 교육과학사.

차경수·모경환(2009), 『사회과교육』, 동문사.

최장집(2002),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학술지

곽준혁, 필립페티(2009), “공화주의와 한국 사회 : 필립 페티 교수와의 대담”, 아세아연구 제52권 제1호 통권135호.

김상현·김희용(2010), “공화주의적 시민교육에 관한 연구 : 비지배로서의 자유와 공화주의 시민권을 중심으로”, 교육철학 제41집(2010년 8월)

김영인(2002), “참여 민주주의 관점에서 제6차·7차 고등학교 사회(일반 사회 영역) 교과서 비교 분석”,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사회과교육』 제41권 1호 (2002. 1)

김주성(2008), “심의민주주의인가, 참여민주주의인가”, 한국정치학회보 제42권 4.

박가나(2012), “참여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본 2007 개정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 정치단원의 참여 내용 분석”, 한국사회과교육학회, 『시민교육연구』 제44권 제2호 (2012. 6)

- 서재천(2007), “공화주의적 자유주의가 우리나라 시민성 교육에서 가지는 함의 고찰”, 사회과교육 제46권 3호 (2007년 9월)
- 서현진(2012), “민주주의 심화와 민주시민교육: 한국과 미국의 고등학교 정치교육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제18권 제3호 통권 제37호(2012. 12)
- 안병진(2008),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역설에 대한 공화주의자의 시각”, 고려대학교아세아문제연구소, 아세아연구. 제51권 제1호 통권131호 (2008년 3월),
- 윤길복(2011),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성 교육의 방향”,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사회과교육연구』, 제18권 제1호 (2011년 2월)
- 이동수(2005),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 『시민사회와 ngo』, 제3권(1).
- 이상인(2008),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 : 일상의 민주주의와 민주적 시민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과교육학회, 『시민교육연구』 제40권 제1호(2008년 3월)
- 이주한(2009) , “듀이 철학에서 정치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교육적 방안”, 한국교육사상연구회, 『교육사상연구』, 제23권 제3호 (2009년 12월)
- 전제철(2006),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국민주권의 원리”,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사회과교육. 제45권 3호 (2006. 9)
- 정원규(2002),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 절차주의적 공화민주주의 모델을 제안하며”, 한국철학회, 제71집 (2002. 여름)
- 조승래(2008), “공화국과 공화주의”, 역사학보 제198집 (2008. 6)

학위논문

김상현(2009), “현대 공화주의와 민주주의에 관한 연구”, 부산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김홍탁(2012),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민주 공화국’ 내용 분석”, 제주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미순(2010), “공화주의 사상의 민주시민 교육적 함의”, 한국교원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병규(2010), “토마스 제퍼슨의 헌법사상”, 동아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ABSTRACT

A contents analysis of the principles of Democracy and Republicanism of social studies textbooks

Park, Young Hwa

Major in Social Studie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is for analysing principles of democracy and republicanism in high school textbooks for social studies.

From the Paragraph 1 of Article 1 in Korean constitution it is specified "Republic of Korea is a democratic republic country," which indicates that 'Democracy' and 'Republicanism' have been combined for the political identity.

It is true that democracy has been recognized among Korean people widely during the process of democratization in South Korea. On the other hand, the other one for the political identity in Korea, Republicanism has been attracted little attention. Even though it has a significant meaning for Korean political system. Also, the key principles of republicanism including the rule of law and the separation of powers have been understood as only the principles for democracy.

Recently it is widely agreed that Korean society has faced on crisis of

democracy. Thus, some scholars have developed a bond of sympathy to find out solutions for the Republicanism in Korea.

A main point for this study is that social studies, in particular, in political education is quite focused on emphasis about Korean democracy studies in high school textbooks, which the education regarding republicanism is relatively insufficient.

It is obvious that Social Studies should be educated the democratic and republicanism principles at the same level, and it should be reconciled. Because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is complemented by Republicanism as well as Democracy. And by giving education concerning Republicanism it will be able to strengthen democracy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bserve details in the textbooks concerning the way of depicting democracy and republicanism in order to find out some problems of the description at the political section in high school social studies textbook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from the textbooks, there were some features which we can recognize. Most of the textbooks have shown more explanations about democratic contents rather than republicanism. Democracy principles in the texts are faithfully descriptive but there is no Republicanism explanation or any possible theories either. As well as Research activities related to Democracy contents are rather common than Republicanism.

Especially it is easily find out that the emphasis on 'participatory democracy' and encouragement for participation in democratic system, but the principles of republicanism can find out hardly except for the contents

of checks and balances.

As growing interest in republicanism, it is necessary to reconfigure about democracy and republicanism in educational contents of textbooks. Therefore, there are some suggestions that is desirable directions.

First, the rule of law and separation of powers are the key principles of republicanism rather than democracy. Because of this, it is required that the symbols of republicanism should be learned in order to make students understand itself as republicanism principles.

Second, social education should move away from excessive focus on democracy and should be educated the rule of law, civic virtues, deliberative mechanism, realization of the common good as republicanism fundamentals. That is why the republicanism principles can be the important driving force for civic education.

Third, the principle of sovereignty, principle of majority decision and political equality are also important contents of democracy, besides, in democratic education as well. It should be stated that those principles should be presented correctly in textbooks as well as participation.

In the future it could be estimated that the principles of democracy and republicanism should be harmonized in the textbooks, and this study would offer of the beginning for implementation.